

통일독일의 경제사회문제와 노동정책과제

1993

한국노동연구원

目次

- I. 社會的 市場經濟의 原理와 統一獨逸
- II. 統一獨逸의 經濟社會問題와 連帶協定
- III. 舊東獨經濟 崩壞의 經濟社會的 要因
- IV. 統一獨逸의 勞使關係 變化와 課題
- V. 東獨經濟의 體制轉換課題
- VI. 統一獨逸의 雇傭安定課題
- VII. 向後展望과 政策方向

參考文獻

附錄

부표목차

- <부표 1> 구동독지역의 ABS지역별 참여자
- <부표 2> ABS의 비정규 노동시장의 비중
- <부표 3> ABS의 비정규 노동시장대책별 비중
- <부표 4> 통일독일 노동시장 상황
- <부표 5> 계절별로 수정된 선별 경기지표
- <부표 6> 업종별 동독의 취업자
- <부표 7> 독일의 경제전망 기초자료
- <부표 8> 구서독지역의 경제전망
- <부표 9> 임금상승률 1986~91
- <부표 10> 서독기업의 1990~92년 사이의 동독에의 투자 및 투자계획
- <부표 11> 동독의 부분별 취업자
- <부표 12> 1989~91 동독 노동시장의 지표
- <부표 13> 동독지역의 2000년까지 환경보호에 필요한 투자예산규모
- <부표 14> 동독제조업의 노동생산성
- <부표 15> 1988년 동독의 해외무역
- <부표 16> 1988년 동·서독 전경제 및 산업에서의 교육 및 활동구조
- <부표 17> 1991년 1/4분기와 4/4분기 동·서독간의 실질소득 비교
- <부표 18> 1991~2000년 동독에서의 투자요소
- <부표 19> 통일독일기금의 대출권한과 재정준비
- <부표 20> 구동·서독지역간의 인구당 세입비교
- <부표 21> 동독에서의 자본형성 및 기업창업촉진 조치
- <부표 22> 공동과제 동독부흥
- <부표 23> 동독기업에 대한 서독 및 외국기업의 인수이유
- <부표 24> 서독기업의 통일독일 프리미엄
- <부표 25> 통일독일의 노동시장 상황
- <부표 26> 실업자 100명당 직업훈련과 ABM의 비중
- <부표 27> 구동독지역의 ABM의 고용인력에 대한 산업별 분포
- <부표 28> 메가-ABM의 내용 및 목적
- <부표 29> 조기정년연금과 정년연금의 신규수혜자수
- <부표 30> 구동서독 직종별 임금수준 비교

I. 社會的市場經濟의 原理와 統一獨逸

사회적 시장경제의 개념은 일반적인 자유시장경제 및 계획경제와 다른 제3의 시장경제체제로 이해된다. 여기에서는 국가가 최소한의 간섭을 주장하는 시장경제 이념과는 다르며 그렇다고 국가가 전적으로 개입·통제하는 중앙계획적 통제 경제체제와도 다르다.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이념으로는 다음의 다섯 가지가 제시된다(Forschungsinstitut der Friedrich-Ebert-Stiftung, 1991).

① 국가는 담합과 독점을 통해서 경쟁을 제한하려는 경향을 반대하며 경제질서유지에 관여한다. 예를 들면 1957년 입안된 反競爭制限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GWB))이 있다. 동법의 정신은 價格담합을 금지하고 기업간 합병에 의해 시장을 지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제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② 국가는 시민의 생존권 보호에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여기에는 노령, 질병, 재해, 실업 등을 대비한 각종 福祉保險政策이 포함된다. 이들 보험정책은 과거의 자유주의 이념과는 달리 개인들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보험담담금의무화등 국가의 관여가 나타난다.

③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불균형적 상황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한다. 즉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석탄산업 및 조선업 지원, 해고근로자의 직업훈련, 조기은퇴규정 등이 그 예이다.

④ 국가는 경제의 논리를 희생시키더라도 환경오염 및 파괴를 가져오는 어떠한 정책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는 사회적 약자, 즉 어린이보호 등과 같이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⑤ 국가는 완전고용 지향, 물가안정, 적정성장 그리고 대외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의 조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시장경제 원리는 통일독일의 勞動政策의 근간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舊東獨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서방세계의 자본주의로의 이행에는 문제가 있다. 즉 블룸(Blum) 교수는 이를 야생마를 타고 가는 사람이 말의 능력대로 달리도록(자유시장경제) 하느냐 혹은 재갈을 채워(사회적 목표가 훌륭히 달성되도록) 타느냐의 선택에 비유한다. 여기에는 동구국가와 동독은 먼저 말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말을 나타낸다.

중앙집권적으로 운용되었던 구동독의 計劃經濟를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필수적인 개혁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들 개혁중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추진되었거나 현재 필요한 조치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① 중앙정부의 경제개입규정의 폐지

㉞ 가격자유화조치 단행

㉟ 대외경제관계의 자유화

② 경제운용에 관련된 구서독법규의 도입

③ 구서독 재정조달제도 적용

㉞ 서독화폐(DM)의 도입

㉟ 은행제도 도입

㊱ 사회보장제도 이전

④ 국유공장(콤비나트)의 분리해체

⑤ 중앙집권적 정부 및 행정조직의 과감한 지방분권화

⑥ 공공투자건설 촉진을 위한 조세제도 개편

⑦ 중앙통제적인 사회주의적 행동양식을 자율적·분권적·능동적으로 전환

이와 같은 사회적 시장경제 원리는 통일독일의 경제이념이 될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제기되는 勞使關係 및 勞動市場經濟의 제문제를 접근하는 근본적 원칙이 되고 있다. 이러한 원리가 함유하고 있는 의미와 정신에 대해서는 勞·使·政 모두 공감하고 있다.

본고는 다음에서 이러한 사회적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통일독일이 안고 있는 경제·사회의 제문제가 극복되어 가는 과정을 분석하게 된다. 필자는 통일독일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사회문제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① 노사관계제도 문제: 連帶協定

② 체제전환문제: 민영화

③ 고용안정문제: 실업

먼저 이러한 세 가지의 경제·사회문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직접적 계기가 되고 있는 동독경제 붕괴요인을 분석해야 한다.

다음으로 위에서 제시된 세 가지 경제·사회문제 중 먼저 통일독일 노사관계 이해를 위해서 최근의 변화요인을 제시하고 이러한 노사관계의 변화 속에서 어떠한 대책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구동독의 사회주의체제가 자본주의체제로 흡수·통합되면서 노사관계도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경제사회의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자본주의체제화가 중요하게 대두된다. 즉 현재 동독지역의 급속한 임금인상은 동독지역 사용자단체의 체제정비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교섭이 이루어져 노조에 비해 상대적인 힘의 공백에서 연유된다고 보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어 노사관계 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통일독일에는 재정적자 해소와 경제회복을 위해서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連帶協定(Solidarpakt)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음으로 동독지역의 자본주의체제로의 전환은 무엇보다도 민영화의 성공적인 추진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서 본고는 體制轉換을 위한 정책과제로서 민영화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통일이 가져온 경제·사회문제로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통독의 고용사정 악화문제이다. 이러한 고용사정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정책수단과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것은 통일독일의 경제문제를 접근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과제가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끝으로 향후 통일독일의 전망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우리 나라의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II. 統一獨逸의 經濟社會問題와 連帶協定(Solidarpakt)

통일독일의 경제·사회적 상황은 당초 예상한 것보다 훨씬 악화되어 있다. 이러한 상태는 한마디로 말해서 급격하게 악화된 고용사정과 높아진 실업률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구동독지역의 취업자수가 1989년 975만명에서 1992년 6월말 현재 678만명으로 지난 3년반 동안 무려 300만명이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서 실업자수도 1990년 55만명에서 1991년에 102만명이던 것이 1992년에는 117만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대량실업자수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고용내용도 극히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당장 실업자로서 고용상태에서 축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인 고용창출대책(Arbeitsbeschaffungsmassnahme 이하 ABM)을 실시함은 물론 조기정년제 또는 직업훈련강화 등으로 노동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인위적인 정책으로 인해 현재의 실업률을 12%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만약 이러한 대책이 없다면 35%의 기록적인 실업률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E. Jesse/A. Mitter(Hrsg.), p.293).

1992년 6월말 현재 전일제 직업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근로자수는 38만명이며 조기정년제 등 정년조정 등에 의한 퇴직자가 78만명, 구동서독 국경을 넘는 장거리 통근자가 57만명, 그리고 단축근로자수가 45만명으로 이들은 모두 정규취업자가 아닌 고용불안정한 상태의 근로자를 의미한다(DIW, 1992년, 6월).

이러한 경제적 문제외에도 통일독일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통일 이후에 양독국민 모두 불만족상태에 있다. 즉 서독국민은 세금부담이 늘어나고(부표 24) 과거 사회보장체제에 의해서 누렸던 국가정책적 각종 복지재원이 삭감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동독경제 재건을 위해서 소요되는 재원을 增稅를 통해서 조달할 수밖에 없다. 당초 기민당(CDU)정부는 통일로 인해서 서독주민의 부담은 없을 것으로 알았으나 1991년 3월 8일 증세

<표 II-1> 구동독지역의 노동시장 상황

(단위: 1,000명)

	1989				1990				1991				1992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전일직업훈련자							0	24	59	108	157	201	270	380
정년조정퇴직자	0	0	0	0	45	190	310	410	430	516	563	661	776	781
실업자	0	0	0	0	13	83	309	556	756	835	1023	1037	1254	1177
국경통근자	0	0	0	0	14	29	92	158	242	340	421	505	552	577
외국인근로자	190	190	190	190	185	180	175	165	150	140	130	120	110	100
총취업자	9930	9928	9820	9754	9582	9158	8759	8193	7996	7604	7302	7191	6892	6786
단축근로자	0	0	0	0	0	0	1295	1736	1926	1962	1464	1113	511	446

조치를 단행하였다.¹⁾

반면 동독국민의 경우도 통일 이후 기대했던 낙관적 희망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기대의 꿈이 무산되는 것을 목격하고 불안해 하고 있다. 1991년 3월 동독인의 39%는 통일 이후 생활상태 악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중 83%는 상황이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60%는 자신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구동독국민은 식민지 지배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어 동서독 통합이 민족적 통합보다는 오히려 이질감을 더욱 부추기는 상태가 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통일독일은 政治的統一(Wiedervereinigung)은 달성했으나 民族統一(Einheit)은 이루어내지 못한 상태에 있다. 통일 이후의 사회적 문제로 무엇보다 근로자의 생활안정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1990년 사회정책 프로그램에서 독일노총(DGB)은 노동, 노동시장, 실업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표명을 통해서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고용안정과 인간적인 근로조건의 확보는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생존을 위한 기초이며 노동과 직업, 사회에서 인간성의 개발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것들은 사회적 법치국가에서 사적인 이윤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근로자는 자신의 능력과 희망에 상응하는 직장과 교육훈련, 그리고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요구를 할 수 있다.”

독일노총은 또한 통일 이후에 독일은 새로운 공핍(Neue Armut)에 직면했으며 많은 근로자들이 침묵하는 예비인력(Stille Reserve), 조기정년으로 강요받거나 원하지 않는 직장(장애자용 특수시설)으로 편입되었다고 공박한다.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 노동강도의 증가, 하향취업(실질적 강등) 등을 감수하여야 한다. 통일 이후 실업자가 겪는 재정적 어려움과 심리적 갈등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되고 있다(Markmann, p. 19).

- ① 재정적 궁핍화
- ② 사회적 접촉의 감소
- ③ 직업의 사회적 위세 추락
- ④ 자신감의 상실
- ⑤ 자아실현과 장래희망 상실
- ⑥ 가족관계 황폐화 및 도덕적 위기
- ⑦ 극우단체의 준등

따라서 통일전에 가졌던 환상이 통일후유증으로 사라지고 極右駿動, 외국인 증오 등 신나치주의자 등장은 국제사회에서 동독의 지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무척 우려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와 함께 統一費用負擔에서 제기되는 社會的 衡平問題가 독일통일 과업의 완수를 어렵게 하고 있다(Puschra, 1992). 원래 통일비용은 민간분야의 투자수요를 포함해서 10년 동안 약 1조DM 정도(약 500조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소요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표 II-2 참조) 이에 대한 재원확보가 급선무로 대두되었다. 통일비용은 임금보조금등 동독지원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동독지역 지원보조금은 1992

[그림 II-1] 실질임금인상률(연평균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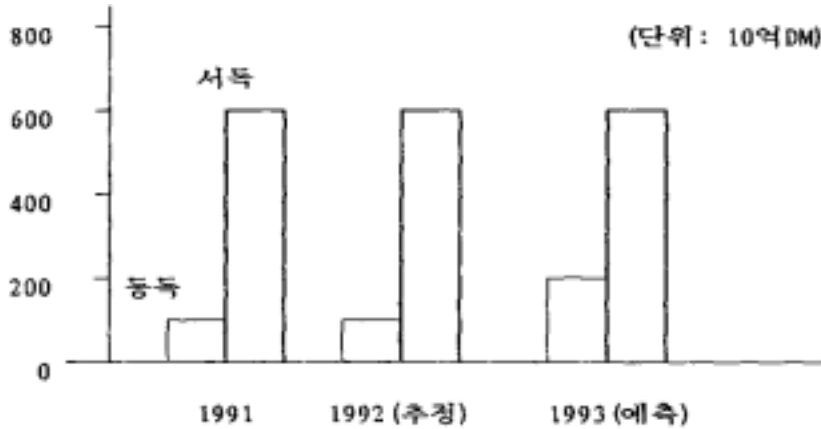
<표 II-2> 재정적자 전망

(단위: 10억DM)

		1992	1993	1994	1995	1996	누계 (1992-96)
연방정부		40	53	46	56	48	243
구서독	주정부	16	18	15	27	17	93
	지방정부	7	8	5	8	3	31
구동독	주정부	19	23	22	9	9	82
	지방정부	5	8	9	5	5	32
전 체		87	110	97	105	82	481

자료: DIW Institute

[그림 II-2] 구동서독 투자규모(경상가격)



자료: DIW Institute

년 한 해만도 1,800억DM가 소요되는데 이는 독일 국민총생산(BSP)의 7%에 달한다(그림 II-2 참조). 이 중에서 서독의 가계부담은 단지 640억DM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공재정과 은행차입을 통해서 충당한다(표 II-2 참조). 이러한 비용부담은 가계실질소득 증가에 의해서 메꿔지는 것이 소망스러우나 실제로는 실질소득 감소 때문에 기대할 수가 없으며 계층에 따라서 달리 부과되므로 사회적 형평문제가 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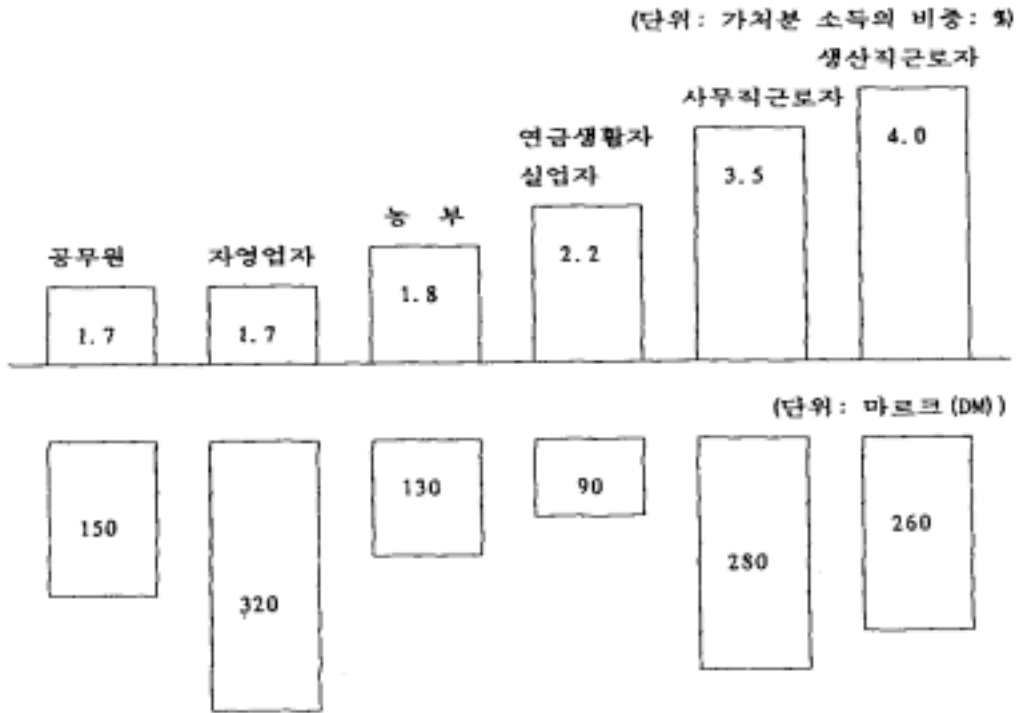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로서는 가장 과중한 부담을 겪는 부문은 근로자와 연금생

<표 II-3> 공공부채

	1980	1989	1990	1991	1992
연방정부	230	491	542	602	653
주	136	308	327	349	374
서독	136	308	327	341	355
동독	-	-	-	8	19
지방자치단체	85	110	113	122	135
서독	85	110	113	117	120
동독	-	-	-	5	15
목적단체	7	8	8	9	9
ERP특별자산	3	7	10	17	25
독일통일기금	-	-	20	51	75
부채상환기금	-	-	28	33	40
전 체	461	924	1048	1183	1311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Deutsche Bundesbank, DIW
entnommen: DIW-Wochenbericht Vom. 38, 1991, p. 547.

[그림 II-3] 직업별 통일비용부담 비중



자료: DGB

활자로 이들은 자신의 소득 중 4%를 할애해야 한다. 반면 가장 적은 부담계층은 소득의 1.7%에 불과한 자영업자나 공무원으로 나타났다(그림 II-3 참조). 이에 따라서 과중한 부담계층은 사회적 형평문제를 제기하고 국가가 더 이상 사회적 理解均衡(soziales Interessenausgleich)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한편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를 위해서 2,000년까지 매년 투입해야 할 소요금액은 1,500억DM로 추산된다. 이러한 소요투자액은 모두 공공재정과 은행차입으로 충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부담을 주고 서독 경제침체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이자율을 낮추고 세금을 인상해야 하는 문제가 사회·경제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당초 콜(Kohl) 수상은 통일전에 국민에게 통일비용을 전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선거공약을 깨고 시한부(1991. 7~1992. 6)로 소득세 7.5% 인상과 함께 실험보험료, 석유세, 전화요금 등 공공성비용을 상향조정했다. 또한 同年 4월에 고용보험료를 4.3%에서 6.8%로 인상했으며 1993년에 1월부터는 부가가치세를 종전의 14%에서 15%로 인상하였다(표 II-4 참조).

이와 같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독경제는 희생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즉 현재의 통독경제는 전후 최악의 저성장 속에서 고물가에 직면하고 있으며, 작년 물가수준은 4.4%로서 지금까지 2% 내외의 물가상승에 비하면 물가폭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처방이 내려져야 되었다.

새로운 경제정책, 즉 경제주체가 제역할을 다하고 고통을 분담하려는 노력없이 통독경제의 회복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책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중요하다.

- ① 통일비용의 부담 면제
- ②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인상논리
- ③ 효율적인 민영화 추진
- ④ 구동독 지역 기업의 희생과 경쟁력 강화
- ⑤ 통독을 이루어낸 국민의 자세 전환
- ⑥ 물가안정과 재정적자 해결

이에 따라서 勞·使·政 三者는 각자 역할 및 고통분담의 자세가 요청되었다. 즉 정부는

물가안정과 함께 재정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기술투자와 특히 동독경제 재건을 위한 투자증대에 힘쓰며 근로자는 소득세 증세 등 통일비용을 분담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콜 수상을 비롯한 바이겔(T. Weigel) 재무장관은 이른바 새로운 경제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콜정부가 사회적 합의형성을 통한 재정적자 해소 및 경제위기 처방으로 내놓은 連帶協

<표 II-4> 연방정부의 재정확대 대책

	재정적 영향 10억DM	
	1991	1992
사회보험 (1991. 4. 1.) ¹⁾		
- 고용보험부담률을 2.5% 상승시켜 6.8%로 ^{2) 3)}	20.2	22.1
- 연금보험부담률을 1% 하락시켜 17.7% ³⁾	-8.1	-11.0
추가적 우편인도 (1991. 4. 1.)	2.0	2.5
세계정책적 조치		
- 임금세 · 소득세 · 법인세에 대한 보조 7.5% (1991. 7. 1.) ⁴⁾	11.25	10.65
- 석유세 인상 (1991. 7. 1.)	5.8	14.0
- 자동차 주행용 (1인당) 유연휘발유: 25Pfg 인상하여 92Pfg로 무연휘발유: 22Pfg 인상하여 82Pfg로 디젤: 10Pfg 인상하여 54Pfg		
- 난방용 난방용 석유: 1인당 2.34Pfg 인상 천연가스: 10Kwh당 1Pfg 인상		
- 보험세 3% 인상하여 10%로 (1991. 7. 1.)	0.7	2.0
- 담배세: 한갑당 1DM 인상 (1992. 1. 1.)	-	1.6
전 계	31.65	40.35

주 : 1) Ifo-Institut의 추정, 2) 1992년부터 부담금비율이 0.5%내려 6.3%로 하락

3) 근로자를 위한 부담금, 4) 1년으로 기간제한

자료: IFO, Ifo-Schnelldienst, 1991. 7. s. 24.

定案은 다음과 같다.²⁾

① 콜 정부는 금년 1월 18일 새로운 증세와 사회적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삭감을 제안하였다.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배경은 재정적자의 누적인데 작년 여름에 이미 380억DM에 달했고 금년에 530억DM 정도나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서 소비지출을 가급적 줄이고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즉 국민은 세금을 많이내고 사회보장혜택은 적게 받는 것이다. 여기에는 실업수당, 가족수당, 여타의 사회보장혜택이 포함된다.

② 콜 수상은 이러한 사회적 합의형성을 밀도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각료급-경제장관, 우정텔레커뮤니케이션장관, 연구장관, 농산부장관-을 경질했다.

③ 한편 바이겔(T. Weigel) 재무장관이 고등분담에 관한 연대협정을 위해 제안한 재정적자 해소방안은 다음과 같다(Financial Times, 1993. 1. 20)

- ㉔ 고소득자 50%에게 통일비용의 70%를 부담하도록 하여 형평을 기하도록 한다.
- ㉕ 1995년부터 통일비용부담을 위해 1991년의 한시적인 세금인상을 다시 실시하도록 한다.
- ㉖ 1994년부터 도로세 및 유류세 등의 증세조치
- ㉗ 해외투자기금으로부터 이자지불을 포함하는 투자소득에 대해 30%세금 확대
- ㉘ 기존 주택구매를 위한 저당에 대해 세금부과 반감조치
- ㉙ 사회보장장보험(화재·생명보험 포함)에 대해 증세(1993년 7월 12%, 1995년 1월 15% 각각 인상)
- ㉚ 1994년과 1995년 매년 1% 중앙정부지출 삭감
- ㉛ 실업수당에 대해 가족이 있는 경우 1%, 무자녀의 경우 3% 삭감
- ㉜ 1993년 300백만DM, 1994~96년 매년 700백만DM 국방비 삭감
- ㉝ 농촌소득지원금을 1993년 2.5%에서 1996년까지 없애는 등 점진적 삭감

㉞ 석탄산업지원금을 1996년까지 855백만DM 삭감

㉟ 1993~95년 동안 160백만DM 조선업 보조금 삭감

㊱ 정치적 망명자(ayelum)에 대해 20억DM 생활지원금 삭감

㊲ 수영장, 하수처리 등과 같이 지역사회 서비스개선 대책실시를 연기할 것을 고려함.

이와 같은 야심에 찬 콜 정부의 재정적자 해소 및 경제재건 대책에 대하여 처음에는 모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영향력 있는 노조조직인 금속노조(IG Metall)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다. 독일경제인연합회(BDI)도 세금인상에 대하여는 독일경제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준다고 반대했으나 공공지출 삭감에 대해서는 지지를 했다. 이러한 노조와 경제계의 긍정적인 반응외에도 가장 극적인 결과는 ‘토요일 밤의 대타협’ 이라고 하는 1993년 3월 13일에 장장 3일간에 걸친 마라톤협상에 의해서 정치적 합의에 도달한 점이다. 당시 협상대표로서 콜 수상, 사민당 당수 엔홀름(Engholm), 16개주수상등 통독의 핵심적인 정치가가 모두 참여하여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로써 1995년 1월부터 7.5% 소득세 인상이 콜 정부의 의도대로 의회의 통과가 이루어지게 되어 통일비용부담의 벽을 넘게 되었다. 이러한 연대협정의 의미는 앞서 노조와 사용자의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제1야당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는 여·야와 노·사가 없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엔홀름 사민당 당수가 범정당 협정안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서명한 이후의 소감을 인용하기로 한다.

“우리는 독일통일의 실현을 위해서 巨步를 내디뎠다. 통일독일은 목적이요 결과이다. 전에는 결코 이를 만나질 동안을 그렇게 유용하고 결실있게 보낸적이 없다.” (Financial Times 1993. 3. 15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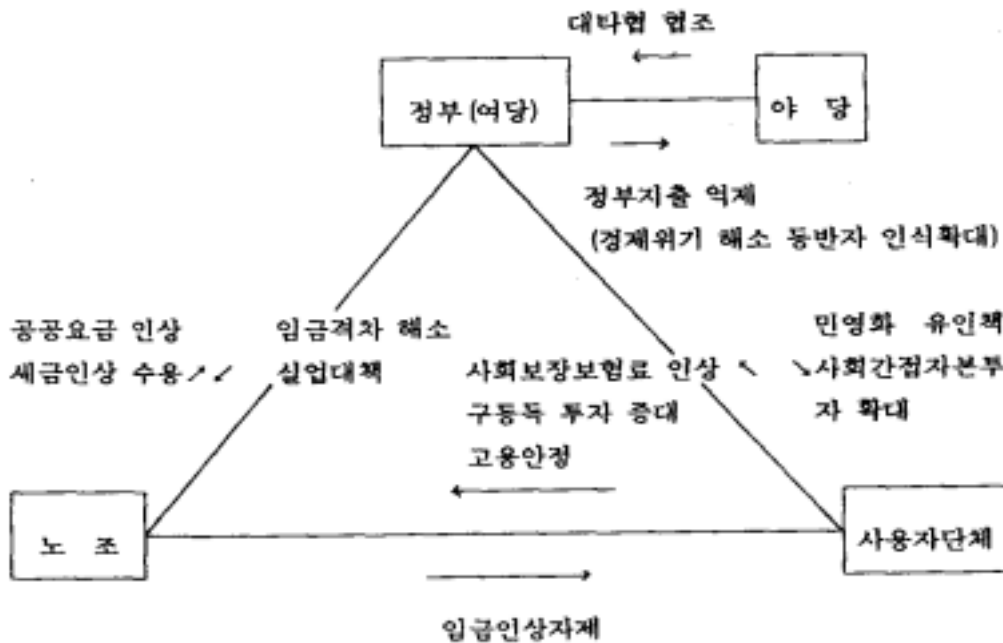
이와 같은 정치적 대타협 분위기가 임금인상과 단체 교섭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노사갈등의 해소에까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社會的 合意主義는 결국 노사관계에서 적용되는 틀이고 특히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임금인상 자체 분위기가 확산이 긴요한 상황에서는 더욱 더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콜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연대협정이 노사관계에서도 성공을 거둘지는 아직 더 기다려 보아야 하지만 고무적인 징후는 이미 나타난 바 있다. 이를 ‘연대협정’ 의 한 사례로 보아도 무방하다.

1992년 4월 27일에 일어났던 노사분규는 처음 독일의 공공노조(OETV)가 주도하여 건설·금융노조까지 확산되었으며 독일의 최대 노조인 금속노조도 동조하는 등 독일경제를 마비시켰다. 이 때의 발단은 노측의 최종임금인상률은 5.4%인데 정부측은 4.8% 인상안으로 맞서 0.6% 차이를 못 좁히고 극단적인 대결상태에까지 치달은 데 있다. 그러나 올해는 통일독일정부의 끈질긴 대국민 설득과 통일독일 경제회생을 위한 고통분담의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1993년 임금협상에서는 과거의 강성이미지와는 정반대로 공공부문 노조는 다른 어느 산별보다도 먼저 작년 임금인상요구율에 훨씬 못 미친 3%로 타결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연대협정’ 전략이 주효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특히 3%인상은 독일 최근 물가인상 4.4%에도 못 미친 실질소득의 감소를 의미해서 더욱 더 그러한 분석을 낳고 있다.

그러나 통일독일 노사관계가 이와 같이 정부의 고통분담 요구에 순응하여 정부정책에 협조적인

것만은 아니다. 자본주의사회에는 노사간의 갈등이 전혀 없는 상태보다는 어느 정도 노사갈등은 필연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노사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치유하면서 파국을 면하는 가에 있다. 구동독지역 철강노조의 1993년 5월 3일 파업이 3주 이상 계속 되었음은 구서독의 합의주의적 노사관계가 통일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의문점을 제시한다. 파업의 직접적인 이유는 1993년 임금인상을 26%로 하여 1995년에는 구서독 수준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2년전 勞使協約을 사용자측이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파기한 데 기인하였다. 이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노사분규의 원인은 통일 이후 경제적 사정이 그렇게 나아진 것도 없고 세금인상을 비롯한 고통분담 요구가 근로자들의 불만을 가져온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이 3주간의 파업은 전통적으로 협조적 노사관계를 유지해 왔던 구서독 노사관계의 모형이 통일 이후에도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노사분규는 이렇다할 파국을 불러 일으키지 않고 파업이 종결되어 사회적 합의주의의 노사관계 모형이 통일 이후에도 노사관계 안정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II-4] 연대협정의 교환체계



주: A→B : A가 B를 위해서 고통분담하는 것을 의미하며 A←B는 이러한 고통분담에 대해 A가 B로부터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적 합의주의의 핵심인 고통분담에 대한 반대급부가 노사 모두에게 보장되어 있는 교환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II-4]에서처럼 노조는 임금인상 자체로 인해 고용안정에 대한 보장을 얻어 내고 기업은 투자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기대하며 정부는 공공요금인상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을 실시하나 물가안정, 실업대책(ABM대책등) 등으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는 이익의 교환체계를 핵심으로 한다.

주석1) 1991년 7월 1일부터 199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임금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7.5% 인상하고 석유세, 보험료, 담배세,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도 단행되었다. 자세한 것은 <표 II-3>을 참조.

주석2) 연대협정(Solidarpakt)에 대해서는 拙稿, 「독일의 協調行動制度(Konzertierte Aktion, Solidarpakt)와 示唆點」, 「勞·使·政間의 社會的 合意形成方案摸索을 위한 토론회」,

III. 舊東獨經濟의 崩壞의 經濟社會的 要因

구동독경제의 붕괴원인은 중앙통제적인 계획경제의 문제점과 서구개방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정부 및 기업의 적응능력의 문제점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될 수 있다. 먼저 비능률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 문제점으로는 모든 경제활동이 시장가격 메카니즘에 의하지 않고 정부의 통제와 관여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非效率性과 非合理性이 온존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모든 책임은 국가가 지게 됨으로써 경제 주체는 수동적으로 움직이며 自發性과 創意性을 발휘할 여지가 없다. 구동독경제도 서방경제체제와 같이 불록경제에 의한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였으나 이들 국가간의 勞動分業은 서방세계처럼 시장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정치·행정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이들 경제공동체는 소련의 정치적·경제적 비중 때문에 개개국가와 가격경쟁력의 比較優位보다는 소련의 比較列位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따라서 사회주의 경제블럭의 국가들은 비경제적 원리에 따라서 특화된 산업을 배정받게 되었다. 이들 국가의 무역관계에서도 수출입의 시장가격 메카니즘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개별국가의 국가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통일과정에서 정책적 판단과오가 오늘날의 동독경제 위기를 자초했다. 특히 통일이 경제적으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추진되기보다는 정치적 이유 또는 민족적 이데올로기가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서 많은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과연 1990년 7월 화폐통합을 1:1로 동독화폐를 과격적으로 절상해야 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무리한 貨幣切上으로 동독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 오늘날의 동독경제 붕괴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근로자의 급격한 임금인상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동독근로자의 임금인상은 정치적으로 조속히 구양독간의 임금격차 해소와 소득수준의 균형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당위성에 의해서 단행되었다. 이에 따라서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못한 무리한 인건비 가중으로 동독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독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진입을 위한 정부대책이 사전 制度的 不備로 해서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즉 信託廳(Treuhandanstalt)의 민영화 추진이 기대에 못 미친 점과 서독기업의 구동독지역 투자가 지지부진한 것도 모두 제도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1992년 9월 현재 민영화율이 60%에 불과하며 이들 기업의 업종도 건축회사, 서비스, 음식료품 등에 집중되었고 가죽, 신발, 의복, 농림업, 광업은 극히 부진한 실정에 있다. 이와 같이 민영화가 지연된 것은 구동독의 투자여건이 극히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이 중에서 불명확한 소유권 문제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미비, 환경문제 등 주로 공공부문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음은 독일상공회의소(DIHT)의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국가는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외에도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①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과 공공서비스의 확대
- ② 관료제적 경직성 타파
- ③ 교육·사회보장제도 그리고 보건위생제도 등 사회지원제도의 확대
- ④ 노동과 자본의 이해대립에 대한 조정력 발휘

마지막으로 구동독기업의 생산양식과 세계시장의 적응능력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60년대까지는 구동독기업의 생산양식에 대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와서는 서독기업은 생산과정에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변화를 모색하였다. 즉 노동의 인간화와 노동생활의 질을 주장하는 사회학자를 비롯한 학계와 노동운동가들이 과거 테일러리즘적인 기계적·과학적 생산방식에 비판을 하기 시작했다. 작업의 능률은 임금과 근로조건의 개선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動機要因을 적극적으로 유발해야 하며 이는 작업자의 동기부여, 만족도, 사기, 소외의 극복, 자율성 건지 등 의사결정과정의 참여증대를 적극 주장하게 되었다. 이는 종전의 포디즘(fordism)에 의한 일관생산공정인 단순반복적·기계적 노동으로 인해서 작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저해되는 비능률적인 생산과정과 전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포디즘의 극복이 60년대말부터 서서히 자리잡기 시작했던 서독기업과는 달리

동독기업은 일관되게 과거 테일러리즘적인 기계적 생산기법에 의한 大量生産體制(mass-production)를 견지했다. 구동독의 생산양식은 군대조직과 유사한 수직명령체계를 유지하고 고도로 표준화된 작업에 의한 대량생산체제를 유지했다. 이러한 생산양식은 동구의 사회주의체제에서도 가장 정교한 형태로 발전되어 이를 초포디즘(Super-Fordism)으로 부르고 있다.¹⁾

이러한 생산양식의 상이성이 동서독간의 경제적 격차를 가져온 것에 대한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 ① 서독기업은 포디즘에 의한 표준화된 규격화된 제품의 대량생산보다는 상품의 차별화로 수요에 맞는 제품생산
- ② 상품의 차별화를 뒷받침하는 기술혁신
- ③ 노동의 인간화와 소외의 극복을 위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사용자에 대한 압력이 포디즘 극복으로 연결
- ④ 생산조직의 유연성, 근로자의 숙련형성 투자 그리고 근로자의 참여확대 등으로 창의적인 기업풍토 조성
- ⑤ 노동자평의회(Betriebsrat), 공동결정권제도 도입으로 근로자의 경영참여확대
- ⑥ 포디즘에 의한 단선적·직접적 통제보다는 근로자의 자발적, 자기책임성 강조로 직장조직의 만족도와 정체성(Identity)을 제고

따라서 독일통일로 인한 후유증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 사회주의의 중앙통제적 계획경제하의 생산양식을 탈피해서 개방적 서구세계 시장경제체제에 맞는 생산체제 개편이 수반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문제는 장기간의 개편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생산양식의 변화노력과 함께 시급한 정책과제는 자본재설비의 현대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즉 앞선 생산양식의 변화는 ‘소프트 웨어’ 변혁 이라고 한다면 이는 ‘하드 웨어’ 혁신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설개체는 국제경쟁력있는 고용창출을 위해서도 불가피하나 여기에 소요되는 투자가 막대하다는 데서 문제가 있다.

1990년 독일은 부분적인 시설현대화에 6,000~7,000억DM를 투입했으며 여기에는 환경투자분은 제외된 것이며 이 중에 교통과 통신설비 개체에만도 2,000~3,000억DM를 투입했다. 1991년 독일경제연구소(DIW)는 사회간접자본시설과 환경투자에 9,000억DM가 소요된다고 전망했다. 연방정부의 IAB연구는 서독수준으로 생산설비를 교체하는 데 사적·공적 투자가 1992~2000년까지 1조 3천억DM가 필요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끝으로 동독지역의 제조업체가 느끼고 있는 기업경영상의 어려움을 살펴보기로 한다. 동독 제조업체가 겪고 있는 기업경영상 어려움에 대해서 1992년 여름에 독일경제연구소(DIW)가 조사한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즉 경영상 어려움으로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 부문은 역시 과도한 임금상승으로서 신탁청기업이 8.3%, 전체기업이 74%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요한 애로요인은 투자자원마련인데 신탁청기업 82%, 전체기업 64%, 사기업 59%로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난다. 그외에 생산설비 낙후, 판매부진, 행정지원체제 문제, 교통통신 등 하부구조, 문제, 숙련기능공의 인력난 등이 중요하게 나타났다.²⁾ 따라서 이들 기업경영상의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없이 현재 통일정부가 치중하고 있는 동독지역 투자확대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업체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도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생산격감으로 인한 고용감소 및 실업증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임은 물론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통일독일은 통일 이후 노동시장 상황이 악화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못한데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는 워낙 통일독일 이후 사전 준비없이 정치적 이유로 통일이 감행된데다 40년 이상 단절된 두 개의 국가가 통합함에 따라서 과거 단절이 쉽지 않는 장기간의 시간이 요구됨과 아울러 비용 또한 막대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표 III-1> 동독지역 제조업체의 기업경영상 제문제

(단위: %)

	전체 기업	신탁청 기업	사 기 업				독립 사기업	서독 또는 해외 소유기업
				민영화된 신탁청 기업	1990년 전사기 업	1990년 이후설 립기업		
과도한 임금상승	74	83	72	78	69	64	71	73
과대한 자금부족	10	22	8	10	7	4	7	9
생산설비 낙후	54	66	50	60	48	40	50	49
과대한 생산설비와 건물 판매부진	51	71	45	57	37	38	46	43
생산품의 질적 수준 문제	11	18	9	15	5	5	8	16
가격담핑문제	37	44	35	41	32	28	33	44
고객서비스 수준 문제	25	31	24	26	20	23	24	22
투자재원 문제	64	82	59	59	58	60	63	34
생산직근로자의 자질 문제	31	26	33	31	35	34	32	37
숙련기능공 인력난	40	20	45	35	55	50	46	40
공급인력 이직문제	12	20	9	9	10	9	10	6
교통·통신등 하부구조 문제	46	32	50	49	49	56	50	53
공장입지 문제	30	12	36	25	43	50	38	20
행정체제 문제	53	37	58	50	61	61	60	45
구동구권 판매의 어려움	37	61	31	49	17	22	27	51

주: 항목별로 문제 있다고 응답한 비중

자료: 1992년 여론 DIW의 설문조사

주석1) W. Kampeter, 『경제통합 이후 동독경제의 붕괴』, 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1992, pp. 25~26.

주석2) 이러한 기업경영상 애로요인이 기업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IV. 統一獨逸의 勞使關係 變化와 課題

경제·사회문제로서 통일 이후의 노사관계 변화와 이에 따른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통일독일을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된다. 독일 노사관계는 전통적으로 共同決定權法(Mitbestimmung)과 經營法(Betriebs-verfassungsgesetz) 등 강한 법적 토대 위에서 형성되었다. 이들의 근본원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토대위에서 형성되었다.

1) 二元的 構造의 노사관계

독일의 노사관계는 강력한 산별체제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각 업종에 대한 임금교섭을 실시하고 있다. 개별기업 근로자의 권익신장은 근로자평의회(Betriebsrat)가 담당하는 二元的 構造를 나타낸다.

2) 근로자 참여적 노사관계

공동결정권(Mitbestimmung)제도를 주내용으로 폭넓은 노사자치적 노사관계를 실현한다. 근로자의 의사결정 참여를 폭 넓게 허용하며 산업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일찍부터 실시되었다.

3) 사회적 시장경제로의 사회적 합의

독일 노사관계는 자본주의체제의 변형으로서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영향하에서 형성되었다. 이는 제한적 경쟁체제와 중앙레벨의 노사조직의 협상력 강화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에서 비롯된다. 실업, 환경, 복지 등 제반문제는 국가의 조정력에 의한 駑·使·政 협조부문에 이해된다.

이러한 세 가지 기본 노사들이 통일 이후에도 지속된다. 즉 구동독지역의 노사관계 모형은 아직 구동독지역의 체제정비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상태에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구서독의 틀을 따른다. 그러나 EC통합, 독일통일, 국제경제환경의 강화 등으로 독일 노사관계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독일노총(DGB)의 조직강화와 위상제고

독일통일에 의해서 300~400만명 정도 신규조합원수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서 조직력 강화가 대두되었으나 독일경제의 침체는 이들에 커다란 짐이 된다. 현재 독일노조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가급적 빨리 동서독간의 소득균형을 달성하는 것이다.

2) 기술혁신과 제3의 산업혁명

기술혁신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가 통일 이후 경제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구동독지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향후 더욱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과거 탈포디즘을 실현했던 독일노조는 보다 더 노동의 인간화 프로그램에 운동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조직의 유연성, 노동시간의 유연성 그리고 경영방식의 유연성 등 3대 유연화 움직임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조직의 유연성은 과거 경직된 위계구조와 관료제 타파에 집중되고 있으며 근로시간은 주 35시간 쟁취목표에 의해서 각종 유연근로시간제가 시도되고 있다. 그리고 경영방식의 유연성은 근로자의 중요의사결정의 경영참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3대 유연화 전략은 창조적인 기술사회와 정보사회의 대두에서 촉진되며 이는 제3의 산업혁명으로 설명된다.

3) 환경문제의 대두

1990년 5월 독일노총 전국대회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환경보호문제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노조도 이제는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단체교섭에서 '환경보호 기업경영합의'가 화학노조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등장하였다. 이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환경바캉스 마련, ② 환경위해여건에 대한 근로자의 저항권, ③ 환경전담부서에 의한 환경보고서 작성, ④ 노사동수 환경보호위원회설치 등이다.

4) EC통합과 근로조건의 평준화 시도

제3산업혁명은 경제의 국제화와 병행되어 진행된다. 생산과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노동세계에서의 깊은 변화가 나타나며 아울러 생산교역이 한층 국제화된다. 이에 따라서 노사관계도 개개 국가의 영향력보다는 경쟁대상국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근로조건과 노동시장여건이 평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고되며 이에 따라서 독일노조의 주도하에서

EC통합에 따른 평준화 노력이 한 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993년부터 유럽통합이 가시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서 12개 회원국가에는 아무런 경계와 장애없이 인적자원교류가 진행될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별 노사관계는 국제화되고 이는 노동운동의 질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5) 독일노조의 단체교섭 전략

현재 통일독일노조의 근본목표는 구동독지역의 소득수준을 구서독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문제와 노동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하도록 하는 두 가지 과제를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자의 동서독간의 임금격차 해소문제는 1993년 5월 3일 구동독 금속노련의 파업을 몰고 온 1993년 임금인상 26%실현과 직결된다. 즉 노조는 1991년 노사합의에 의해 1993년 26%, 1994년 30%를 각각 인상해서 구동독 임금격차를 해소한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최근 경기침체를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9% 인상안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후자의 노동의 인간화 프로그램은 80년대부터 준비해 왔던 ‘단협개혁 2000’ 이 그것이다. 이러한 단협개혁 목표는 노동의 인간화를 기하면서 아울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Markmann, p.35).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노동의 내용과 질의 개선 및 근로자 능력개발 제고
- ② 근로조건의 합의실현
- ③ 보건 환경보호조치 마련
- ④ 여성근로자의 기회평등 실현과 사회결합 증대
- ⑤ 공동의사결정기회 확대 및 근로생활의 민주화 실현
- ⑥ 유연한 생산방식도입 실현과 생산기술 및 작업조직 변화에 대한 대응력 제고
- ⑦ 노동의 인간화 및 생산성 제고 동시 실현
- ⑧ 생산과정의 인간소외극복과 능력개발 증대
- ⑨ 경영참가 실현

6) 통일독일의 근로조건

현 동독지역 기업의 경쟁력 상실은 생산성은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임금상승에서 비롯되며 이는 不均衡의 勞使關係에 의해서 설명된다. 즉 서독지역의 강력한 노동조합의 지원하에서 구동독지역의 노조도 일찍부터 체제정비가 마무리 되었으나 사용자단체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즉 일부 산별의 경우에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힘의 불균형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현재의 일부 업종의 교섭방식은 독일의 산별교섭체계가 아닌 기업별체제까지도 나타나는 등 극히 과도기적 상태를 보이고 있다(목재, 출판업, 화학 등). 통일독일 노사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최근의 임금교섭 실태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7) 최근의 임금교섭 상황과 노사관계

1992년 임금교섭 실태는 교섭여건의 악화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7% 임금인상을 기록했다. 임금인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생산성 향상이 최근 5년 동안 가장 낮은 0.7%에 불과하였으나 반면에 물가수준은 80년대에 들어와서 가장 높은 4.0% 인상하여 실질임금이 그만큼 줄어든 것을 감수해야 했다.

또한 독일에서 임금교섭시 중요한 과제로 매년 제기된 근로시간 단축교섭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저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1992년 타결된 평균근로시간은 1992년 12월 31일 현재 37.4시간으로서 전년에 비해 0.2시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1992년 교섭성과는 노조가 임금교섭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도 어느 정도 지속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1993년은 과거와 같은 노조의 압력이 먹혀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1992년도 경제실적이 최악의 상태를 보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1992년 하반기에는 GNP성장이 ‘마이너스’ 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서 단축근로자수가 다시 늘어났고 실업률도 높아졌다.

1993년 경제성장 전망을 보면 잘 하면 ‘제로’ 성장에 머무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도 예상되고 있다. 또한 물가도 연초 부가가치세 증가로 인해서 3.5% 인상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사용자는 경기침체와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인해 물가상승 폭 만큼 임금인상을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작년부터 주장한 연대협정(Solidarpakt)카드로 근로자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3년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율은 대체로 5%(공공부문)~8%(목재산업)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서 1993년 노사관계는 긴장상태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고조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독일 노사관계는 사회적 합의주의 모형이 견지되어 왔음에 비추어 극한적인 대립상황은 초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1> 임금·물가·생산성 비교(1971~92)

(1993년 1월 현재)

	생 산 성	물 가	임 금 인 상
1971	+2.6	+5.1	+13.2
1976	+5.9	+4.4	+ 5.9
1981	+0.3	+6.3	+ 5.5
1986	+0.8	-0.2	+ 3.5
1991	+1.1	+3.6	+ 6.2
1992	+0.7	+4.0	+ 5.7

자료: WSI-Tarifarchiv.

<표 IV-2> 구동서독지역의 주요산업임금수준 비교

(1992년 12월 31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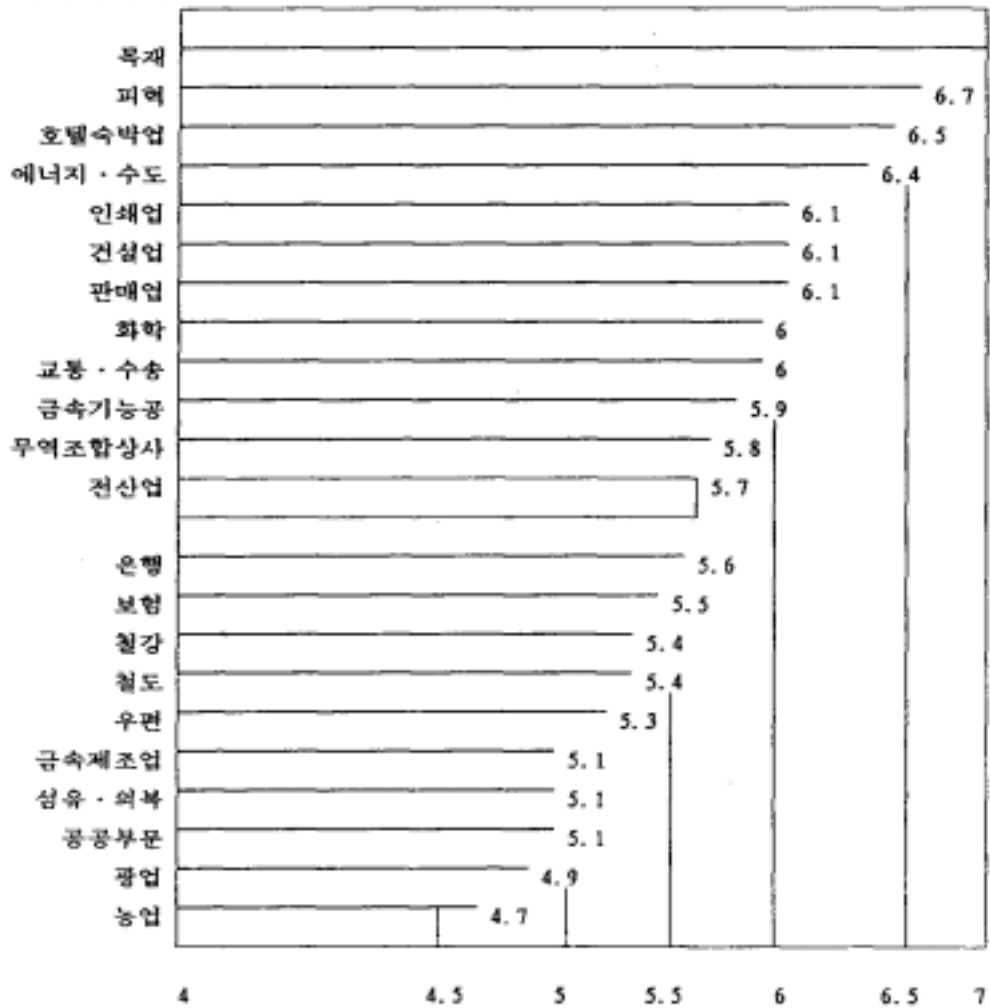
산 업	임금비교 (%)	월임금수준 (DM) ¹⁾
신발	72.7	1,586
철강	68.7	1,684
종이제조업 ²⁾	68.1	1,879
사은행업	71.2	2,556
석탄가스산업	70.3	2,783

주: 1) 중간계층

2) 작센-안할트, 튀링겐, 작센

자료: WSI-Tarifarch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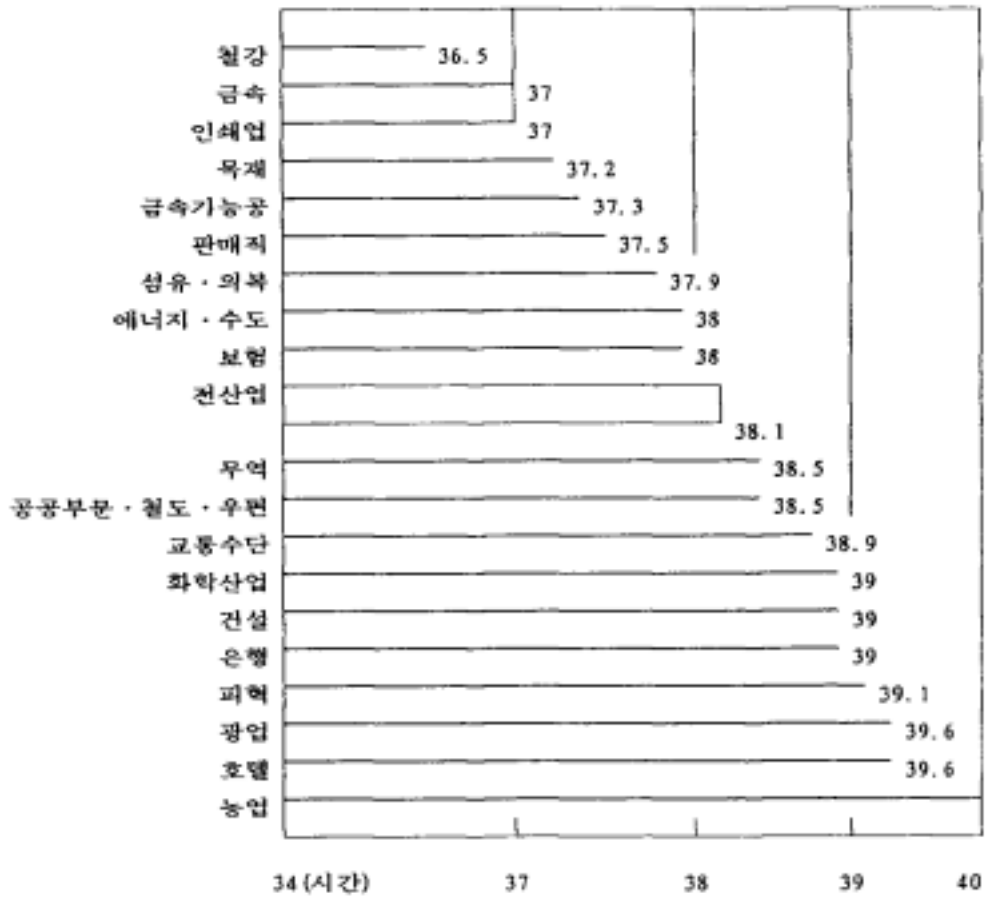
[그림 IV-1] 1992년 평균임금인상률



주: 종업원 1,000명 이상 업체

자료: WSI-Tarifarchiv,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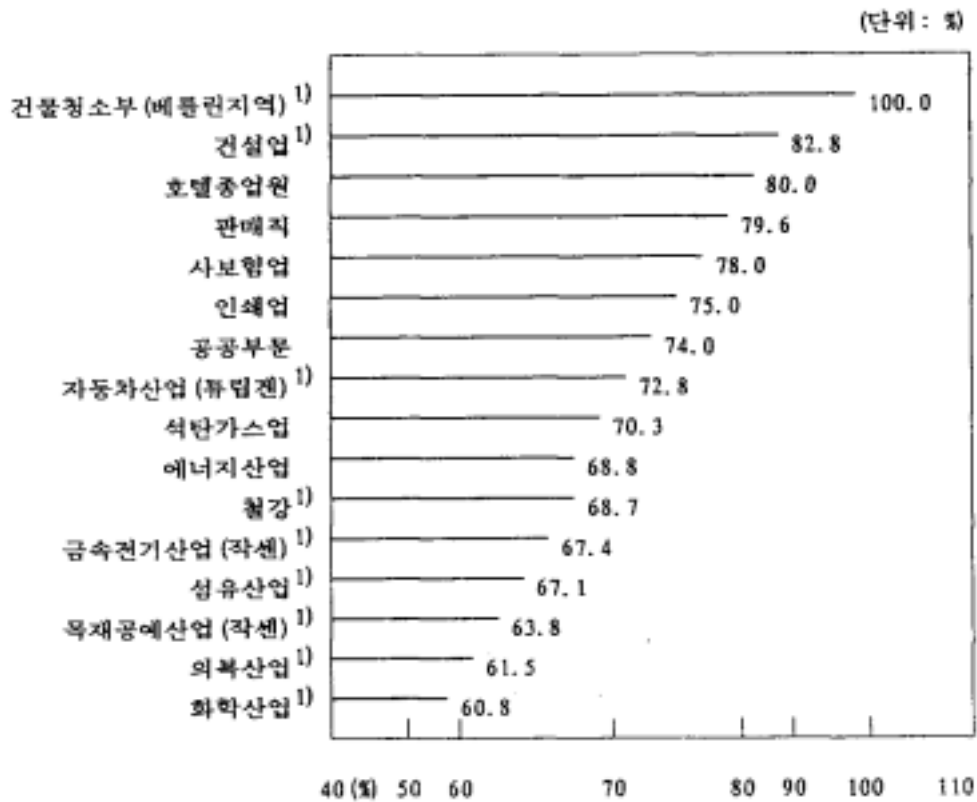
[그림 IV-2] 주요업종의 근로시간 교섭실태(1992년 12월 31일)



주: 연2일 휴가 추가

자료: WSI-Tarifarchiv, 1993.

[그림 IV-3] 구동서독지역 임금수준 비교 (1992년 12월 13일 현재)



주: 1) 임금 (Lohn) 만을 비교한 것임.
 자료: WSI-Tarifarchiv, 1993.

V. 東獨經濟의 體制轉換課題

통일독일이 겪고 있는 통일 후유증의 근원은 반세기 가까이 나누어져 있던 이질적인 두 체제가 일방적으로 흡수·통합되면서 나타나는 체제전환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체제전환의 문제로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구동독기업의 민영화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통일독일의 失業問題를 분석하는 데는 동독기업의 民營化問題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일독일의 가장 큰 당면과제인 노동시장의 수급균형은 동독지역 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경쟁력 강화의 진전과 관련된다.

독일정부는 동독지역 기업이 과거 계획경제체제에 따라서 경쟁력과 비교우위와 관계없이 경영된다고 보고 엄격한 시장논리에 따라서 운영되는 체제전환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른 방안의 하나로써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동독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즉 정부는 1990년 7월 17일 信託管理法(후에 국유재산의 사유화와 재편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信託廳(Treuhandanstalt)을 설립하였다.

처음 신탁청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동독지역 기업의 취업근로자를 고용감소없이 현상태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신탁청은 그 운영과정에서 중대한 딜레마에 처해 있다. 즉 민영화 초기의 까다로운 조건을 그대로 고수하느냐 또는 조건을 완화해서까지 급속한 해체작업을 추진하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다. 초기에 동독기업의 민영화 조건으로 정당한 매각가격과 현 고용수준 유지를 가장 중요하게 제시되었다. 여기에서 동독기업의 부채를 인수기업이 책임을 짐과 동시에 환경보호 책임을 아울러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당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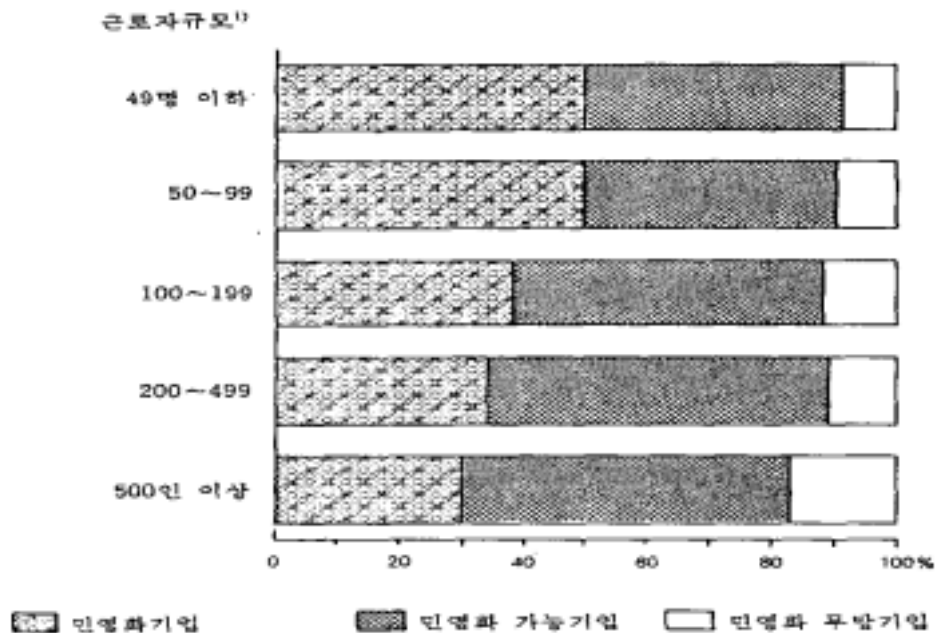
조건은 동독기업의 시장성이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제시됨에 따라서 극히 부진한 민영화 실적을 보였다. 또한 민영화 추진은 경쟁력 유무가 관건이고 경쟁력 상실기업은 폐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소생가능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기업정상화에 대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폐업의 방법을 동원하여야 했다.

1990년에는 408개 기업에 불과한 극히 저조한 민영화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신탁청이 앞선 조건을 완화한 결과 1992년부터 가속화되어 1992년 7월 1일 현재 민영화기업은 총 8,175개 기업으로서 대략 60%의 민영화율을 보이고 있다. 이를 분기별로 보면 1991년 2/4분기부터 민영화기업이 1,322개로 높아진 이후 계속해서 1,000개 이상의 기업이 매분기마다 민영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 민영화기업의 분포를 보면 [그림 V-1] 에서와 같이 99명 이하 종업원의 소규모기업의 민영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00인 이상 대규모 기업들에서도 향후 구매에 대한 관심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제도적인 뒷받침만 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신탁청에 의해서 해체된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고용상황 변화를 고찰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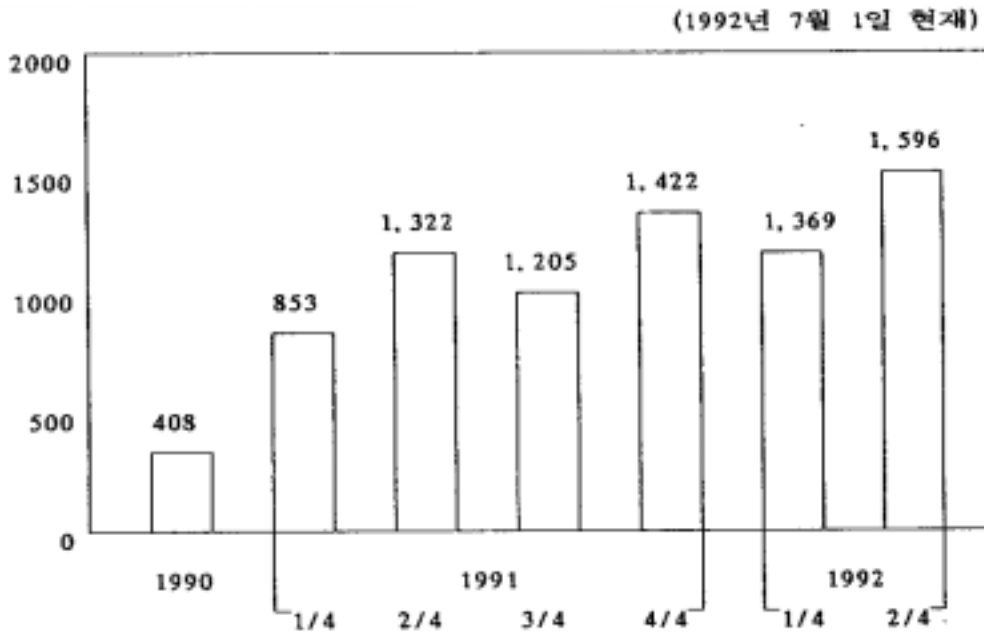
[그림 V-1] 신탁청관리제조업체의 기업규모별 민영화 추진전망



주 : 종업원수는 1992년 6월30일 현재

자료 : 1992년 여론 설문조사(Df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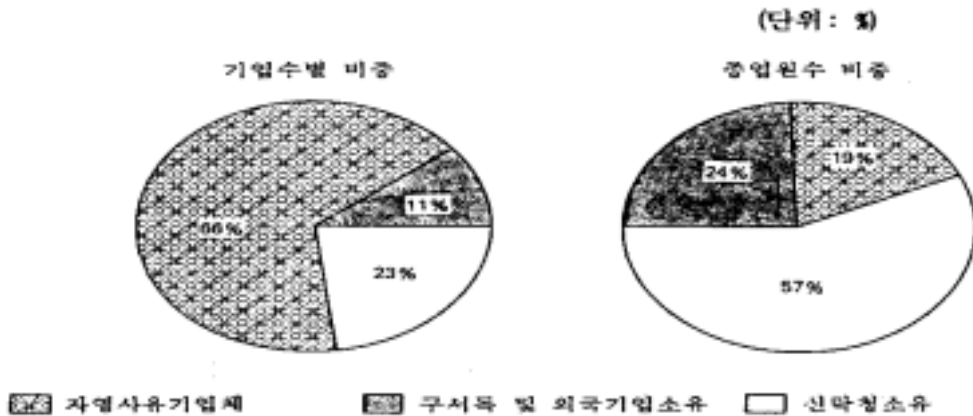
[그림 V-2] 분기별 민영화 추진실적



자료: Informationen Treuhandanstalt, 1992. 8. 15일자

은 실업문제 파악에 도움을 준다. 특히 동독지역에서 신탁청 관할기업의 경제적 비중은 숫적으로는 23%에 불과하지만 종업원수면에서는 57%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개인기업의 경우는 숫적으로는 66%에 달해 가장 많은 기업소유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종업원수에서는 전체취업자수의 19%에 불과해서 동독지역에서는 소규모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동독지역의 勞動市場政策은 이들 신탁청기업의 고용관리를 어떻게 해나가는냐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신탁청의 목적은 고용감소를 최소한에 그치고 파산상태의 기업을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살려나가는 데 있으나 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부득히 파산시킬 수밖에 없다. 또한 민영화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종업원을 모두 흡수할 수는 없다. 즉 사회주의 계획경제하에서는 완전고용을 지향하

[그림 V-3] 구동독 제조업체의 소유형태별 구조



자료: 1992년 여름 설문조사(DIW)

기 때문에 불필요한 인력도 많이 고용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이들 해체기업의 근로자 향방을 보면 1991년 3/4분기의 경우 227,000명이 신탁청에 의해서 해체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25.9%만이 신탁청 이외의 기업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16.5%가 직업훈련등 노동시장정책에 혜택을 받으며 15.0%가 더 이상 취업하지 않으며 그외 23.6%가 실업자로 남으며 기타 알려지지 않는 근로자가 18.9%를 합하면 사실상 42.5%가 失業狀態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

이에 따라서 신탁청관리하의 기업에 의한 고용감축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노동시장과 직업연구소(IAB)가 집계한 3,838개 신탁회사에 취업자수가 1991년 1월 1일에 183만명에 달했으나 1992년 1월 1일에 87만명, 1992년 7월 1일 78만명으로 줄어들었으며 1995년초까지는 50만명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²⁾

따라서 실업문제 해결에 신탁회사의 고용유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신탁회사의 재정난 때문에 기업매각에 급급한 실정에 있다. 즉 과거 고용유지, 환경보고서 작성 등 의무적 조건을 많이 완화하고 최근에는 바겐세일(Schlussverkauf)까지 나서고 있다고 독일 여론은 비판하고 있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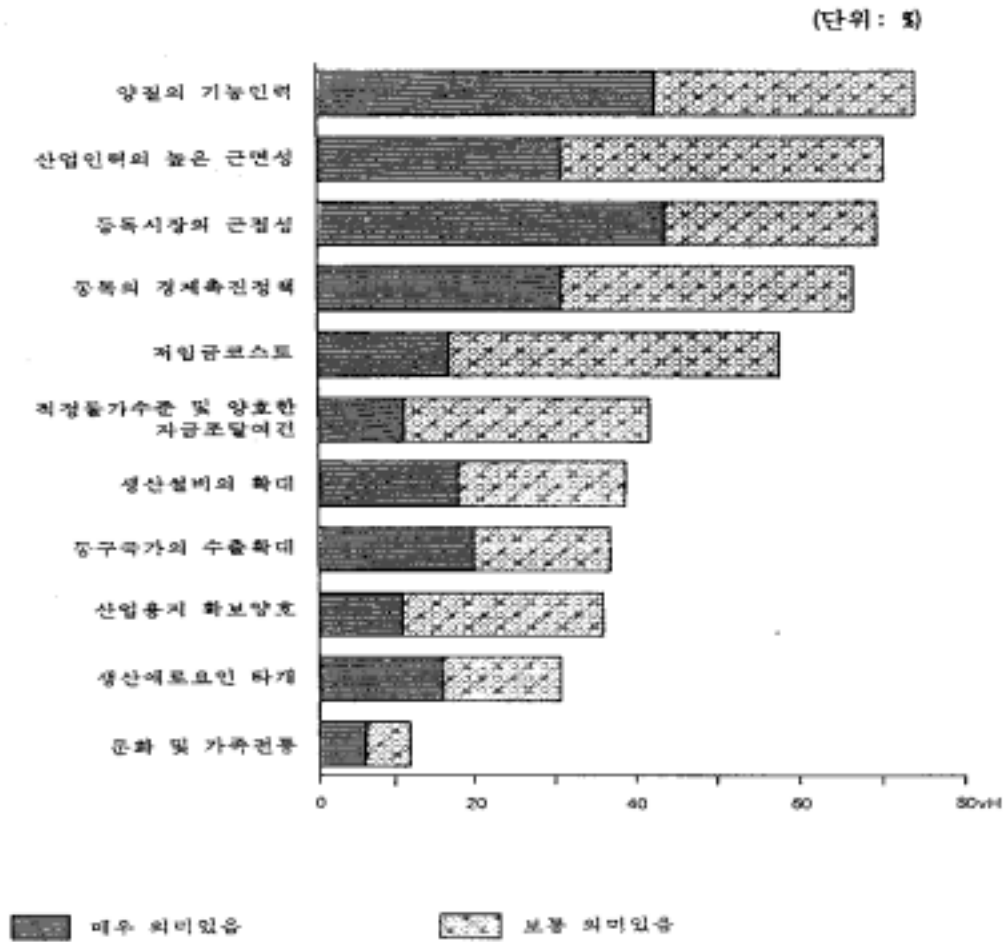
한편 민영화에 가장 높은 진척을 보인 업종은 건축업, 건축소재산업, 서비스, 식료품 그리고 자동차제조업 등이며 어려운 업종은 가죽·신발산업, 농림업, 광업 그리고 섬유제조업 등이다. 동독에 제조업체의 설립과 경영에 대한 서독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이 가지고 있는 동기는 민영화 추진을 위한 동독투자 유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동기로서는 잘 숙련된 기능공의 존재를 들고 있으며, 다음으로 동독시장 진출, 구동독의 경제추진정책,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비용, 낮은 물가 또는 금융비용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V-4 참조). 이에 따라서 이러한 투자동기요인이 지속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실효성 있는 민영화 추진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다.

<표 V-1> 신탁청기업의 취업자 변화추이

(3,838개 기업, 명)

	1991. 1. 1.	1992. 1. 1.	1992. 4. 1.	1992. 7. 1.
취업자수	1,837,172	872,961	783,467	676,930

[그림 V-4] 동독 제조업체에 대한 서독 및 외국기업인의 인수와 투자 동기



자료: 1992년 여론 설문조사(DIW)

주석1) IAB Kurzbericht Nr. 3, 1992년 1월 22일자. 따라서 해체에 의한 바로 실업상태에 들어간 근로자가 40%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주석2) IAB Werkstattbericht, Nr. 1. 7, 1992년 7월 15일, p. 17.

주석3)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 동독의 실업문제는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으로 파악된다는 점이며 경쟁력없는 기업은 청산(sanierung)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VI. 統一獨逸의 雇傭安定課題

통일독일이 겪고 있는 경제·사회문제로서 가장 광범위하게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는 실업률이다. 즉 고용안정을 통한 실업문제의 해결없이는 통일로 인한 국민의 기대를 근본적으로 흔들 뿐만 아니라 독일의 통치이념이 되고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되게 된다.

독일의 고용정책은 사회적 시장경제이념의 구현이 근간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노동시장정책은 경제구조 변동과정에서 일어나는 노동력수급 불균형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제순환과정상 대량실업상태가 야기됨에 따라서 실업자의 사회적 보호와 보장이 불가결하게 된다. 이러한 연관에서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失業保險은 두 가지 기능을 전통적으로 수행하였다. 실업자에게 생계수단을 보장하는 것과 아울러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후자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은 실업보험이 존재함으로써 실업자가 조속히 재취업되어야 하는 압력을 그만큼 줄여나갈 수 있다. 그러나 실업보험은 노사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관계로 다른 사회보험, 예를 들면 비스마르크시대의 의료, 사고, 비보장성보험과 달리 50년이나 늦은 1927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의 노동시장정책은 補償的 성격에서 머무르는 소극적 성격을 가졌으나 1969년 雇傭促進法(Arbeitsfoerderungsgesetz: AFG)의 제정 이후에는 적극성을 갖게 되었다. 동법은 공공노동시장정책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실업자보호에 대한 사회적 노동시장정책의 도구를 위한 기초로서 의미를 갖는다. 즉 실업률을 가급적 낮추도록 직·간접으로 관여를 할 수 있는 법적 기초가 형성되어 있다. 고용촉진법은 1967년 경제안정 및 성장의 촉진법(Gesetz zur Foerderung der Stabilitae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과 더불어 높은 고용상태 유지, 고용구조개선 그리고 경제성장의 촉진 등의 목적을 갖고 있다.¹⁾ 이러한 고용촉진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다양한 수단이 동원된다.

- ① 노동시장의 직업연구
 - ② 노동시장 중개
 - ③ 외국노동력의 도입
 - ④ 직업알선
 - ⑤ 직업훈련연수의 개인적·제도적 촉진
 - ⑥ 일자리 창출촉진
 - ⑦ 실업수당과 실업자부조를 통한 실업자의 사회보장과 재투입을 위한 능력개발
- 그러나 동법이 처음 실시된 때와 지금은 노동시장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즉 초기에는 高度經濟成長期에 인력부족을 타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으나 이제는 고용확대를 위한 일자리 형성촉진대책이 필요한 시대에 있다. 또한 빠른 기술발전, 세계시장의 확대 그리고 그만큼 치열해진 국제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문 우수인력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서 고용촉진법은 노동시장의 수급 균형을 위한 제반 대책으로서의 법적 뒷받침이 되고 있다. 이하에서 우리는 이들 법적·제도적 고용대책을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통일독일의 고용시장은 과거 유례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計劃經濟에서 市場經濟體制로의 전환에 따른 문제인 동시에 산업구조 개편에 의해서 제기되는 문제도 크다. 즉 서구산업국가는 과거 이미 경험한 바이나 구동독국가 경제는 농업에 과도한 의존도를 보였다. 이제는 제3차산업으로 구조개편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라서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즉 1987년에 비해서 1/5정도 고용감소가 일어났으며 계속해서 실업자수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전환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사회간접자본시설등 각종 하부구조의 개선과 높은 숙련화를 기하는 것이다.

고용시장정책의 목표는 노동시장과 직업연구소(IAB)의 시나리오에서 잘 들어나고 있다. 2000년까지 현재의 고용인력 630만명을 700만명으로 올리고 기록된 실업자수를 60만명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왔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과제는 이를 위해 매년 총 1,300억DM의 투자가 필요하며 사회생산성장률을 매년 동부에 11%를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동독지역에 노동시장문제를 해결하는데 생산설비와 하부구조 개선에 대한 투자가 확실해야 하며 경쟁력있는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에 공적·사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勞動市場政策은 구조변화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들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석된다(Markmann).

첫째, 소방수기능의 수행(Feuwehrfunktion)으로 이는 노동시장에 인력이 과잉공급되는 것을 막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대한 수단으로서 연수·직업훈련 등의 교육, 고용창출정책 실시, 조기정년제도 실시, 단축근로자보조금제도 등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雇傭促進法(AFG)에 규정되어 있다. 1991년 중반 이래로 이러한 조치에 의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200만명에 달한다. 연방정이 1992년 동독지역에 투자했던 430억DM 중에서 이러한 조치에 사용된 금액이 250억DM나 된다.

둘째, 노동시장정책의 교량기능(Brueckenfunktion)이 중장기적으로 중요하다. 이러한 기능은 경제발전과 경제회복에 대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투자저해요인의 제거에 초점을 맞추는데 하부구조 개선과 행정구조의 개혁, 노동력의 질적 고도화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노동시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투자확대 등 공동작업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독일 노동시장정책은 사회적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각종 사회보장 성격의 지원을 통한 방법과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고용확대를 위한 제반대책의 마련 등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물론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다. 즉 후자의 의미에서도 각종 임금보조금을 지원하여 교육, 일자리 창출 등 고용확대를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 정책으로서는 失業手當(Arbeitslosengeld)을 들 수 있는데 1990년 경우 연방노동청 총예산의 40%에 해당하는 179억DM가 지출되었다. 후자의 정책으로서는 앞서 이미 언급한 ABM대책과 고용회사(ABS) 등을 들 수 있는데 그외에도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단축조업수당: 경제적 이유로 조업을 할 수 없을 때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원칙적으로 6개월 지급되며 순임금의 63%가 지급된다. 이 기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이들 단축조업자에게 직업훈련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1991년에는 약 70억DM가 지출되었다.²⁾
- ② 계절수당: 건설업등 계절적 실업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악천후 등 기후조건에 의한 고용감소의 경우에도 동계수당, 악천후수당 등의 제도가 있다.
- ③ 취업추진지원: 취업에 대한 부대비용 지급 또는 자영업개업 지원 등 과도기적 수당제도가 있다.
- ④ 노동수요의 공급의 연계지원: 직장알선, 직장자문, 직업상담 등의 행정지원도 하고 있다.
- ⑤ 사회적 부조화 대상자 취업지원: 지체장애자, 정신장애자, 외국인근로자, 이주민 등에 대한 재활지원, 시험고용지원(Probezeit), 어학훈련지원 등이 있다.
- ⑥ 조기은퇴지원금제도(Vorruhestand): 장년근로자들은 조기은퇴시켜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한다.

이러한 각종 고용정책의 제도가 고용촉진법(AFG)의 법적 뒷받침에 의해서 마련되어 있으나 통일 이후 실업상황을 타개하는 데는 막대한 재정수요가 요구되고 구조적 변혁에 따른 과거 유례없는 상황에 따라 보다 혁신적인 조치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서 독일정부는 한편으로는 교육을 실시하여 과거 계획경제체제하의 인력을 새로운 서구자본주의체제에 적응되는 인력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대대적인 교육실시를 권장한다. 이러한 교육조치는 이들을 체제적합적 인력으로 육성하는 의미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실업상태에서 無生産人力으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장래를 준비하는 의미도 갖고 있어 이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들 교육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Langkau, pp. 22~25).

- ① 직업향상교육: 직업에 관한 지식과 숙련도를 높여 기술변천에 적응하도록 하여 장차 승진과 자기개발 향상을 기하도록 함.
- ② 직업재교육: 현재의 위치보다 나은 직업 그리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갖도록 준비하는 교육

- ③ 일자리 적응교육: 고용촉진법에 따라서 실업상태에 있거나 실업의 위기에 처한 근로자에게 실시

이들에게는 순임금의 65~75%까지 생활비가 지급된다(실업부조금: 56~58% 비교).

위와 같은 교육실시 이외에도 통일 이후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고용창출을 기대하는 대책으로 앞서 부분적으로 언급한 ABM정책이다. ABM정책의 원래 목적은 실업자들이 정상적인 직장상황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과거 서독에서는 ABM정책의 대상자는 지역적으로 정규일 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집단이였다. 그러나 통일 이후 대량실업상태에 즈음하여 ABM정책도 보다 적극성을 갖게 되고 규모도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Mega-ABM대책(300만DM 이상 소요되는 ABM대책)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ABM대책의 효과는 이들 대책이 없었다면 실업자는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견된다는 분석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통일 이후에는 시한부이기는 하나 ABM대상자의 조건이 완화되고 수혜의 폭도 높아졌다(서독은 임금의 50~75%; 동독은 100% 지급). 통일전에는 ABM에 적합한 업종발굴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이 개시되었으나 이제는 그 업종이 무차별로 실시되어 어려움이 없다. 이에 대한 적합업종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L무하며, p. 26).

- ①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향상,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산업부지확보, 하수구·배수구 개조, 교통망

개조

- ② 환경오염, 폐해 제거, 광산과 화학오염물질 방출로 인한 생태계 파괴 제거작업
- ③ 사회복지시설 개조, 병원시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의 개조·개량
- ④ 관광간접자본구조의 개조 내지 창설
- ⑤ 주거지 개조, 마을 개조

한편 고용정책으로서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대책은 雇傭會社 설립이다. 다음에서 자세하게 언급하게 될 고용회사는 일종의 용역회사로서 실직된 근로자가 주축이 되어 형성되며 이들은 대형프로젝트를 맡아서 운영하거나 (갈탄, 노천굴사업, 환경미화작업) 법률전문가에 의한 법적 자문회사, 교육훈련전담회사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따라서 고용회사는 근로기회를 창출하거나 ABM의 집행기관, 지방행정기관의 업무대행 등 다양하다. 이러한 회사는 고용창조가 교육훈련회사와 결합하여 생산적인 일에 투입되거나 시간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교육에도 참여하여 작업반과 교육반의 고대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다음에는 위에서 언급한 ABM대책의 부가적인 의미로서 직업교육과 고용회사를 자세하게 다룬다.

직업훈련교육

독일 직업훈련교육 유형은 職業教育(Ausbildung), 發展教育(Fortbildung), 研修教育(Weiterbildung) 등으로 나누어진다. 생산기술과 경영체제 혁신에 의해서 그리고 서비스 등 제3차산업의 발전과 수요변화에 따라서 고용기회 확대와 일자리 안정성이 점점 양호해지고 있는데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의 전문화 및 자질향상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서 직업교육과 연수교육은 노동시장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다.³⁾고도로 숙련화된 노동력 없이는 경제성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다.

직업교육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인력의 노동시장 적응에 대한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나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인 직업발전 가능성과 적응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현재 실업상태의 근로자와 장애자 등 노동시장 기피 가능성 있는 인력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동시에 비숙련·반숙련근로자의 직업교육을 아울러 강화해야 한다. 공공교육기관이든 기업훈련이든 기회균등을 기해야 하며 엘리트 양성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원칙하에서 실시되고 있는 獨逸教育訓練制度는 크게 두 가지의 대상을 갖는다. 독일 자국민과 해외유입인력이 그것이다. 목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체에게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는 목적과 실업문제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흔히 독일의 직업훈련교육제도는 기업체와 직업훈련학교가 상호협력에서 실시하므로 二元的 教育制度로서 표현된다. 먼저 사업체에 의한 실시는 민간사업체, 상공회의소, 수공업협회 등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다. 그러나 교육훈련에 필요한 제반 요건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① 자격있는 훈련요원 충원
- ② 적합한 시설 및 장비구비
- ③ 규정된 훈련계획
- ④ 시험기준마련

이러한 규정은 동일직업의 모든 훈련생에게 동일한 질의 훈련을 보장하거나 표준화된 직업훈련을 통해서 인문교육제도와 연계시키려는 필요성에서 제기된다. 이들은 각자 마련된 사업체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시되며 기능 및 실기위주의 現場訓練이 주목적이다. 훈련기간은 주당 3~4일간 실시되고 이들의 신분은 어디까지나 훈련생으로 볼 수 있으며 1학년 매월 약 500DM, 2학년 매월 약 600DM, 3학년 매월 약 700DM로 일정액의 수당이 지급된다.

다음으로 직업학교가 있는데 정부가 주체가 되어 실시되며 정규학교의 교과과정이 마련되고 이들 교육내용은 이론지식 함양에 있으며, 교사도 공무원 신분을 갖는 정규교원이며 참가자는 주당 1~2일 교육을 받는 학생신분이다.

통일독일정부는 이러한 교육제도에 의해서 실업자를 방지해 두지 않고 사회적 시장경제논리에 따라서 教育訓練과 雇傭對策에 의해서 흡수하려고 한다. 이러한 효과는 <부표 2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비생산적인 단축근로자가 급속히 줄어들고 그 대신에 직업훈련교육 참가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1992년 7월 현재

직업훈련교육의 참여자는 500,000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는 ABM 취업자 400,000명보다도 많다. 이러한 직업훈련참여자가 불과 1년전에 200,0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급속히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업자 100명 중 직업훈련과 ABM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교육훈련기여도가 더욱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구동독 전체에서 직업훈련이 45명, ABM이 36명으로 각각 나타났다(부표 28 참조).

이와 같은 교육제도와는 별도로 고용정책에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것은

雇用促進(Arbeitsfoerderung), 雇用(Beschaeftigung) 그리고 構造發展(Strukturentwicklung)의 고용회사이다.

IAB는 고용회사가 구조변동을 사회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노동시장정책적으로 지원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구동독의 구조변동은 기업에게 엄청난 고용감소를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구조변동도 따지고 보면 고용회사에 의해서 노동시장과 사회정책적으로 지원을 받는다. 이러한 지원으로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 고용촉진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빠르고 효과적으로 마련되어질 필요가 있다.

고용회사는 고용을 증대하고 교육을 실시하며 노동시장과 관련된 제반 제도를 실시하는 독립적인 법적으로 공인된 기관이며 여기에는 공공지원의무사업과 교육이 포함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용회사는 구조변동에 따라 요구되는 노동력을 준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모든 회사가 스스로 그러한 대책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종사자가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중재하고 조정하며 협동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서 고용회사는 다음과 같이 개념규정을 할 수 있다.

① 공적·사적 권리의 법적인 인격체

② 고용증대, 직업교육 때로는 모든 노동시장 관련 행동을 전담함.

③ 여기에는 공적으로 요구되는 의무적인 노동 또는 질적 고도화 조치(초기교육, 연수교육, 발전교육 그리고 직업훈련교육)가 수행됨.

한편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영역은 다음과 같다.

① 처음으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② 우선적으로 경제적인 개개이익을 추구하는 순수교육기관(경제교습소, 직업촉진교육센터)

③ 법적으로 종속된 기업부서

현재 독일의 고용회사수는 200에서 2,000개까지 추산된다. 구동독지역에만도 38개 노동청 관할하에 1991년 현재 333개 회사가 설립되었으며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12만명에 달한다.

신탁청 보고에 따르면 신탁청 기업의 고용회사가 250개 정도되는데 여기에 20만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⁴⁾

최근의 고용회사의 비중을 보면 <부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991. 12. ~ 1991. 1. 현재 고용회사가 참가자가 약 12만명으로서 전체실업자를 제외한 비정규근로자(직업훈련자, ABM대상자 그리고 단축근로자) 115만명의 10.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숫자는 1년전에 비해서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석1) 이들 법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는 安斗淳, 『統一獨逸 勞動市場狀況과 政策課題』, 1993년 9월 발간예정.

주석2) 원칙적으로 일시적인 단축조업인 경우에만 해당되나 철강산업처럼 구조적인 위기의 산업의 경우에도 지급되고 있다.

주석3) 독일의 직업교육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연계되어 실시된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통일 이후 노동시장 상황의 악화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즉 독일의 실업대책은 교육훈련강화에 의한 고용정책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Schoenfeldt, 1992).

주석4) 신탁청과 관련없는 고용회사가 있기 때문에 고용회사의 수는 IAB의 추산보다도 훨씬 많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숫자는 전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3의 고용회사에 소속하는 인원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신탁청 계산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독립적이지 않은 기업 하부부서에 의한 것은 고용회사에 속하지 않으나 신탁청 통계에 잡혀져 있는 모순도 있다.

VII. 向後展望과 政策方向

답에 대한 국민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더욱 더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기된다.

參考文獻

- 베르너 푸쉬라·金元植, 「統一獨逸의 社會經濟的 變化」, 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韓國勞動研究院 노사관계고위지도자과정 강의안, 1992.
- 斐眞永, 「舊東獨의 價格體系와 市場經濟體制로의 轉換」,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1.
- 선펠트(Eberhard Schoenfeldt),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정책적 과제」, 제10회 한·독경상문제 학술 심포지움, 1992.
- 캠페터(W. Kampeter), 「경제통합 이후 동독경제의 붕괴」, 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1992.
- Berechnungen des DIW und des IAW aus Mitarbeiter des DIW/IAW, Einkommen und Verbrauch der privaten Haushalte in den alten und neuen Bundesländern, in: *DIW-Wochenbericht* 29, 1991.
- B. Gorzig, M. Gounig, Produktivität und Wettbewerbsfähigkeit der Wirtschaft der DDR, In: *DIW-Beiträge zur Strukturforschung, Heft* 121, 1991.
- BfGA, aufgrund der Daten der Sammelstelle für die Statistik der Unfallversicherung (SSUV)
- Bundesanstalt für Arbeit, *IAB*
- Bundesfinanzministerium, *Finanzbericht*, 1992.
- Das Sozio-ökonomische Panel(Ost)*, 1990/91.
- Deutsche Bundesbank, *Monatsbericht* 3, 1991.
- DIW, *DIW-Wochenbericht*, 39~40, 1991.
- DIW, *DIW-Wochenbericht*, 12, 24, 1991.
- Jesse E. & A. Mitter(Hrsg.), *Die Gestaltung der deutschen Einheit, Geschichte-Politik-Gesellschaft*, Schriftenreihe Band, S. 308.

베르너 푸쉬라 · 金元植, 「統一獨逸의 社會經濟的 變化」, 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韓國勞動研究院 노사관계고위지도자과정 강의안, 1992.

裴眞永, 「舊東獨의 價格體系와 市場經濟體制로의 轉換」,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1.

쾨펠트(Eberhard Schoenfeldt),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정책적 과제」, 제10회 한 · 독경상문제 학술 심포지움, 1992.

캄페터(W. Kampeter), 「경제통합 이후 동독경제의 붕괴」, 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1992.

Berechnungen des DIW und des IAW aus Mitarbeiter des DIW/IAW, Einkommen und Verbrauch der privaten Haushalte in den alten und neuen Bundesländern, in: *DIW-Wochenbericht* 29, 1991.

B. Gorzig, M. Gounig, Produktivität und Wettbewerbsfähigkeit der Wirtschaft der DDR, In: *DIW-Beiträge zur Strukturforschung, Heft* 121, 1991.

BIGA, aufgrund der Daten der Sammelstelle für die Statistik der Unfallversicherung (SSUV)

Bundesanstalt für Arbeit, *IAB*

Bundesfinanzministerium, *Finanzbericht*, 1992.

Das Sozio-ökonomische Panel(Ost), 1990/91.

Deutsche Bundesbank, *Monatsbericht* 3, 1991.

DIW, *DIW-Wochenbericht*, 39~40, 1991.

DIW, *DIW-Wochenbericht*, 12, 24, 1991.

Jesse E. & A. Mitter(Hrsg.), *Die Gestaltung der deutschen Einheit, Geschichte-Politik-Gesellschaft*, Schriftenreihe Band, S. 308.

<附錄> 統一獨逸의 經濟社會現況資料¹⁾

<부표 1> 구동독지역의 ABS지역별 참여자

(1991. 12~92. 1. 현재)

	ABS		참 가 자					
	설립중	기설립	전 체	제1차 교육	직업훈련 연수	ABM	단 속 근로자	기 타
Necklenburg-Vorpommern	8	49	11,143	335	2,611	4,047	4,150	-
Brandenburg	16	86	11,611	485	1,471	6,902	2,715	236
Sachsen-Anhalt	17	46	24,031	454	1,362	18,068	4,147	-
Sachsen ¹⁾	26	58	49,414	1,006	6,875	13,254	21,618	6,661
Thuringen	4	28	27,547	-	9,485	4,421	11,781	1,860
Berlin-Ost	18	66	6,090	-	-	5,290	800	-
Gesamt	89	333	129,836	2,280	21,804	51,982	45,013	8,757
Necklenburg-Vorpommern (in %)		49	100	3.0	23.4	36.3	37.3	-
Brandenburg (in %)		86	100	4.2	12.7	59.4	21.7	2.0
Sachsen-Anhalt (in %)		46	100	1.9	5.7	75.2	17.2	-
Sachsen ¹⁾ (in %)		58	100	2.0	13.9	26.8	43.7	13.5
Thuringen (in %)		28	100	-	34.4	16.0	42.8	6.8
Berlin-Ost (in %)		66	100	-	-	86.9	13.1	-
Gesamt (in %)		333	129,836	1.8	16.8	40.0	34.7	6.7

주: von bisher gesamten 9 ABS-Sondervermögen ist nur eine enthalten
자료: IAB

<부표 2> ABS의 비정규 노동시장의 비중

	전 체		ABS		ABS 비중
	근로자수	비 중 (%)	근로자수	비 중 (%)	
FuU	435,200	37.9	21,804	18.4	5.0
ABM	389,861	33.9	51,982	43.8	13.3
Kug mit Arbeitsausfall über 75% (= Kug*0*)	323,881	28.2	45,013	37.8	13.9
전 체	1,148,942	100.0	118,799	100.0	10.3

자료: Bundesanstalt für Arbeit; IAB

<부표 3> ABS의 비정규 노동시장대책별 비중 (1991. 12. 현재)

(단위: %)

	ABS (개)	ABS/ABM	ABS/ 교육훈련연수	ABS/단축근로자 (75%) 근무	ABS/ 전체대책
Mecklenburg- Vorpommern	49	7.4	5.0	8.6	7.0
Brandenburg	86	11.8	2.2	4.5	6.0
Sachsen-Anhalt	46	22.9	1.9	8.8	11.8
Sachsen	58	12.2	5.4	24.5	12.9
Thuringen	28	6.3	12.3	20.5	12.5
Berlin-Ost	66	27.3	-	2.9	7.0
전 체	333	13.3	5.0	13.9	10.3

자료: IAB

<부표 4> 통일독일 노동시장상황

(1991년 7월 현재)

	구 서독 지역		구 동독 지역	
실업자	1,827,712	6.7	1,188,234	15.1
여자	853,010	7.4	759,949	20.1
남자	974,702	6.2	428,285	10.4
20세 이하	64,038		33,335	
외국인	249,491			
단축근로자	158,514		337,760	
고용창출정책	80,157		388,692	

<부표 5> 계절별로 수정된 선별 경기지표¹⁾

	실업자	새로운 [※] 일자리	제조업의 계약고(총량) ²⁾					
			주요부분				국내	해외
			총	원자재 및 생산재업종	투자재 업종	소비재 업종		
단위: 1,000명		1985 = 100						
1990. 12. 현재	1711	311	112.3	115.7	122.6	132.5	131.3	107.6
1991. 12. 현재	1665	316	119.0	113.0	120.6	123.9	126.1	107.5
1992. 2. 현재	1663	345	127.2	117.9	131.3	129.7	136.4	111.9

주: 1) 베를린 방식(BV3)에 따라 계절별로 수정.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의미 있는 수치의 원래 값이 변하지 않고 있다면 새 수치의 참가에 있어 이미 있는 계절별로 수정된 수치는 시간배열에서 변화될 수도 있다. 분기별 수치는 계절별로 수정된 월수치에서 계산되었다.

2) 그 밖의 것은 노동작업일별로 수정.

※ 노동청에 등록된 새로운 일자리를 의미한다.

자료: Bundesanstalt für Arbeit und Statistisches Bundesamt.

<부표 6> 업종별 동독의 취업자

(단위: 100명, %)

	1990년 6월			1991년 3/4월			지표 (1990 = 100)			취업구조 (%)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1990	1991
경제영역											
농·임업	722	337	1059	411	195	606	57	58	57	12	8
에너지 및 광업	276	99	375	208	64	272	75	65	73	4	4
에너지·수도	136	53	189	100	32	132	74	60	70	2	2
광업	140	46	186	108	32	140	77	70	75	2	2
제조업	1744	1228	2972	1329	869	2198	76	71	74	34	30
원자재 및 생산재	499	321	820	468	281	749	94	88	91	9	10
무자재	901	528	1429	565	302	867	63	57	61	16	12
소비재	192	272	464	188	189	377	98	69	81	5	5
식품업 및 기호식품	152	107	259	108	97	205	71	91	79	3	3
건설업	509	111	620	506	99	605	99	89	98	7	8

<부표 74>의 계속

	1900년 6월			1991년 3/4월			지표 (1990 = 100)			취업구조 (%)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1990	1991
비공식부문	1464	2304	3768	1464	2184	3648	100	95	97	43	50
상업	203	565	768	261	511	772	129	90	101	9	11
교통	489	273	762	402	194	596	82	71	78	9	8
사적 서비스, 국가 및 사적 단체	772	1466	2238	801	1479	2280	104	101	102	25	31
사적 서비스업	94	201	295	144	271	415	153	135	141	3	6
금융기관 및 보험업	4	49	53	30	85	115	(750)	173	217	(0.6)	2
숙박업	26	67	93	37	75	112	142	112	120	1	2
그외 서비스	64	85	149	77	111	188	120	131	126	2	3
국가	639	1219	1858	624	1179	1803	98	97	97	21	25
취업성적이 없는 사적가계, 사적단체	39	46	85	33	29	62	85	63	73	1	1
기타	202	143	345	180	150	330	89	105	96	4	5
전 체	4917	4223	9140	4098	3565	7663	83	84	84	100	100

주: 1) 국내개념

자료: Das Sozio-ökonomische Panel (Ost), 1990~91.

<부표 7> 독일의 경제전망 기초자료

	서독			동독			독일		
	1990	1991	1992 ¹⁾	1990	1991	1992 ¹⁾	1990	1991	1992 ¹⁾
사회총생산 ²⁾ (전년도 대비변화 %)	4.5	3.1	1	-14.4	-30.3	10.5	2.6	0.2	1.5
취업자 (1,000명) ³⁾	28,433	29,173	29,400	8,855	7,166	6,125	37,288	36,339	35,525
실업자 (1,000명)	1,883	1,689	1,780	240	913	1,350	2,123	2,602	3,150
실업률 (%) ⁴⁾	6.2	5.5	5.8	-	11.3	18.1	-	6.7	8.1
소비자가격 ⁵⁾	2.6	3.6	3%	0.2	13.6	12	2.3	4.7	5
국가재정결산 (10억 DM) ⁶⁾	-	-	-	-	-	-	-	-94.4	-102
수행결산 (10억 DM) ⁷⁾	-	-	-	-	-	-	79.4	-34.3	-17

주: 1) 참여연구기관 추정결과에 근거

2) 서독은 1985년 가격, 동독 및 독일은 1991년 가격

3) 국내

4) 민간경제활동인구 (취업자 + 실업자)

5) 민간소비의 가격수준

6) 국민경제 총계산의 한계에서

7) 지불결산통계의 한계에서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Deutsche Bundesbank: 자체계산

<부표 8> 구서독지역의 경제전망

	1990	1991	1992 ¹⁾	1990	1991	1992 ¹⁾
	절대값			전년도 대비변화 %		
실질사회총생산 ²⁾ (10억 DM)	2 138, 7	2 205, 9	2 228, 5	4.5	3.1	1
실질국내수요 ²⁾	2 072, 0	2 134, 8	2 160	4.5	3.0	1
실질총생산 ^{2) 3)}	2 924, 6	3 090, 5	3 147, 5	6.3	5.7	2
취업자 (국내 1,000명)	28 433	29 173	29 400	2.9	2.6	1
실업자 (1,000명)	1 883	1 689	1 780	-7.6	-10.3	5.5
실업률 ⁴⁾ (%)	6.2	5.5	5.8			
소비자가격 ⁵⁾ (1985=100)	107, 3	111, 1	115, 3	2.6	3.6	3.4

주: 1) 참여연구기관의 추정결과에 근거

2) 1985년 가격

3) 국내수요 + 수출

4) 민간경제활동인구(취업자 + 실업자)

5) 민간소비의 가격수준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자체계산

<부표 9> 임금상승률 1986~91 (전년대비 변화 %)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명목	3.5	2.3	3.2	4.0	5.1	6.9
전체	3.5	2.2	3.1	3.9	5.0	6.7
남자	3.5	2.7	3.5	4.5	5.2	7.4
여자	3.5	2.4	3.0	3.7	5.1	6.9
제조업	2.5	1.9	3.7	3.2	5.2	7.8
건설업	3.7	2.4	3.2	4.4	5.0	6.7
서비스업	3.7	2.4	3.4	4.1	5.1	6.9
숙련근로자	3.1	2.0	2.8	3.9	5.1	6.8
반숙련근로자	2.7	2.2	2.9	3.3	4.9	6.8
미숙련·단순근로자	2.9	1.9	3.0	3.7	5.0	7.1
공장·사무실·기술직	3.9	2.6	3.4	4.3	5.1	6.6
판매직	4.6	3.5	2.7	3.8	5.7	8.1
소비자가격 지표 (연평균)	0.8	1.4	1.9	3.2	5.4	5.9
실질	2.7	0.9	1.3	0.8	-0.3	0.9

자료: BIGA, aufgrund der Daten der Sammelstelle für die Statistik der Unfallversicherung (SSUV), 1991.

<부표 10> 서독기업의 1990~92년 사이의 동독에의 투자 및 투자계획(10억 DM)

	전체	제조업	건설업	상업	은행	보험
			광의의 투자 ¹⁾			
1990	7.0	3.0	0.4	0.8	2.4	0.4
1991	20.0	13.5	1.3	3.5	1.2	0.5
1992	24.2	17.5	1.3	3.4	1.5	0.5
			협의의 투자 ²⁾			
1990	3.2	1.5	0.3	0.5	0.8	0.1
1991	13.5	9.0	0.8	2.5	0.9	0.3
1992	21.5	16.0	1.0	3.0	1.2	0.3

주: 1) 참여업종 포함 및 중고·대여시설도 포함

2) 시설 및 장비에 국한

자료: IFO, Ifo-Schnelldienst 25~26, 1991, S. 3.

<부표 11> 동독의 부문별 취업자

(단위: 1,000명)

	취업자									
	1989		1990				1991			
		후반기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농·임업	961	959	885	840	790	720	640	600	555	515
상품제조업	4269	4237	4106	3872	3555	3195	2717	2330	2305	2403
광업 및 제조업	3670	3641	3536	3391	3090	2760	2360	1980	1930	2013
건설업	600	596	569	481	464	435	357	450	375	390
상업 및 교통	1409	1407	1399	1365	1283	1178	1120	1030	990	990
상업	732	732	728	708	646	575	550	530	520	520
교통	678	676	671	657	636	602	570	500	470	470
서비스 및 국가	3025	3014	2976	2969	2942	2869	2860	2625	2280	2110
서비스	1088	1085	1074	1082	1094	1114	1115	1035	940	920
국가	1750	1743	1720	1710	1680	1600	1600	1450	1200	1050
영업목적이 없는 민간조직	187	187	182	177	168	155	145	140	140	140
자 료	9644	9616	9366	9045	8569	7962	7337	6585	6130	6018

자료: DIW, DIW-Wochenbericht, 12, 24, 1991.

<부표 12> 1989~91 동독 노동시장의 지표

(단위: 1,000명)

	1989	1990 (3/4분기)	1991 (2/4분기)	1991. 9.
취업자	약 9600 ¹⁾	8661	7164	
근로자		8299	6654	
자영업 및 보조				
가족단위 작업장 고용인		362	510	
교외통근자		98	335	450
실업자		445	843	1029
단축근로자		1757	1965	1332
대기자		180	250	
ABM 취업자		4	148	313
직업교육자				
조기은퇴자, 연금보험수령자				
이주자 1/89~4/91	755			약 450 ¹⁾
이주자 1/90~4/91	411			

주: 1) 추정

자료: DIW, *DIW-Wochenbericht*, 39~40, 1991.

Frankfurter Rundschau, 9. 10. 1991.

<부표 13> 동독지역의 2000년까지 환경보호에 필요한 투자예산규모

지출영역	총비용 (10억DM)		
	공적추정부터	공적추정까지	
공기정화	5,0	35,0	22,5
상수도설비	16,8	30,0	16,9
하수도처리	53,0	150,0	125,2
쓰레기처리	3,0	34,3	34,3 ¹⁾
과거부담의 정리	3,0	70,0	10,6
소음방지	2,0	2,0	2,0
전 체			
- 개별추정	82,8	323,3	211,4
- 총 추정	83,0	500,0	

주: 1) 운영비용 포함

자료: IFO, *Ifo-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11*, 1991, S. 10.

<부표 14> 동독제조업의 노동생산성(서독수준에서 %)

	1970	1980	1988
화학·석유·인조재료·고무	34	45	50
제강·제철	39	44	35
골재	39	41	42
철강·기계·자동차	43	46	56
전자·광학·첨단기술	41	47	63
섬유	53	56	56
경공업	54	56	57
식품가공업	56	45	43
제조업	45	48	53

자료: B. Gorzig, M. Gounig, Produktivität und Wettbewerbsfähigkeit der Wirtschaft der DDR. In: *D/W-Beiträge zur Strukturforchung*, Heft 121, 1991, S. 27.

<부표 15> 1988년 동독의 해외무역

	수출		수입	
	외국환비교가치 10억DM	%	외국환비교가치 10억DM	%
총수출	135.3	100.0	141.7	100.0
그 중				
RGW 국가		43.8		40.4
소련		24.8		24.3
체코슬로바키아		5.8		5.0
비사회주의국가		52.1		54.8
서독		20.8		17.6
프랑스		4.3		3.9
스웨덴		3.0		2.1
오스트리아		1.6		5.2
1988 수출비율	DDR 39.1 ¹⁾	BRD 32.4 ²⁾		
1988 수입비율	40.9 ¹⁾	26.6 ²⁾		

주: 1) 국내총생산에 근거한 외국환 대비교가치로서의 수출입 Mark

2) 국내총생산에 근거한 수출입가격 DM, 경상가격

자료: B. Gorzig, M. Gounig, Produktivität und Wettbewerbsfähigkeit der
Wirtschaft der DDR. In: *DIW-Beiträge zur Strukturforchung*, Heft
121, 1991, S. 17, 52.

<부표 16> 1988년 등·서독 전경제 및 산업에서의 교육 및 활동구조(고용인 %)

	서독	동독	서독	동독
	총		산업	
직업교육 무	16.1	5.4	17.4	6.0
직업교육 무	53.6	61.0	57.6	66.1
전문교육학교 졸업	16.7	23.3	16.3	20.6
대학졸업	13.5	10.3	8.7	7.3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완료	34.9	32.9	56.5	47.2
연구·기술	5.4	4.1	8.0	5.4
수송	5.4	9.6	4.8	7.6
상업	11.4	6.7	7.3	2.2
경리	3.9	2.0	1.6	0.9
사무실·행정	23.6	30.8	16.7	31.1
지휘·상담	3.2	4.3	3.8	4.4
교육·지도	12.2	9.6	1.3	1.2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자료: B. Gorzig, M. Gounig, *Produktivitat und Wettbewerbsfahigkeit der DDR*, Berlin, 1991, S. 42.

<부표 17> 1991년 1/4분기와 4/4분기 동·서독간의 실질소득 비교

	평균명목소득 서독 ²⁾ 동독 (DM)		동독의 실질구 매력 ¹⁾ (%)	구매력차이 수정한 소득/동독/DM (DM)	실질 소득차이 (서독= 100)	
					1/4	4/4 ³⁾
모든 연금생활자가계	2794	1298	137	1781	64	60
모든 근로자가계	4437	2738	129	3546	80	73
모든 근로자가계의 상유 1/3 (소득계층 기준)	6864	3976	129	5122	75	68

주: 1) 동독에서의 DM 구매력과 서독에서의 DM 구매력 관계
 2) 1990년 평균
 3) 추정

자료: Berechnungen des DIW und des IAW aus Mitarbeiter des DIW/IAW, Einkommen und Verbrauch der privaten Haushalte in den alten neuen Bundesländern, in: *DIW-Wochenbericht* 29, 1991, S. 411.

<부표 18> 1991~2000년 동독에서의 투자요소

(단위: 10억DM)

1. 기자재설비 5백만 일자리의 현대화	
- 2,5백만 새일자리의 창출	500
- 7,5백만 일자리를 위한 기자재 총액	500
2. 주택건설	1000
- 6백만주택 보수 20,000qm당	120
- 1억 4천 qm 주택지 조성 (qm당 2,500DM)	350
- 총	470
3. 환경보고	211
4. 에너지산업에의 투자	50
5. 교통	210
6. 전화·통신	60
총 1~6: 투자수요 1991~2000	2001

자료: J. Priewe und R. Hickel, *Der Preis der Einheit*, S. 123.

<부표 19> 통일독일기금의 대출권한과 재정준비

10억DM						
	대출 권한	연말의 부채상황	부채 상환 ¹⁾	연방재정 에서 보조	새연방주 로의 지불	계획된 증자 (1991. 10. 기준) ²⁾
	1	2	3	4	(1 + 4)	
1990	20.0	20.0	-	2.0	22.0	
1991	31.0	51.0	2.0	4.0	35.0	
1992	24.0	75.0	5.1	4.0	28.0	33.9
1993	15.0	90.0	7.5	5.0	20.0	25.9
1994	5.0	95.0	9.0	5.0	10.0	15.9
ab 1995	-		9.5	-	-	

주: 1) 부채상환은 연방정부와 구서독 연방주에서 각기 반반씩 부담, 이것은 다시금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40% 부담

2) 연간 24.5억DM 구조지원기금의 삭감 및 1990~1994 사이의 연방정부의 연간 59억DM 절약

자료: J. Prieue und R. Hickel, *Der Preis der Einheit*, S. 136.

<부표 20> 구동·서독지역간의 인구당 세입비교

1991~95까지 거주인구당 동·서독의 세입	1991	1992	1995
연방주			
서독	3300	3500	4300
동독	1150	1300	2100
지방자치단체			
서독	1300	1400	1650
동독	150	300	850
인구당 세입: 동독을 서독기준으로 %			
연방주	34.8	37.2	48.8
지방자치단체	11.5	21.4	48.48

자료: DIW, *DIW-Wochenbericht* 24, 1991, S. 343.

주석 1) 본 연구의 최신 통계자료 수집 및 번역은 독일자유베를린대학(Freie Universitaet Berlin) 사회복지전공 박사과정의 李容甲에 의한 것임을 밝혀둔다.

